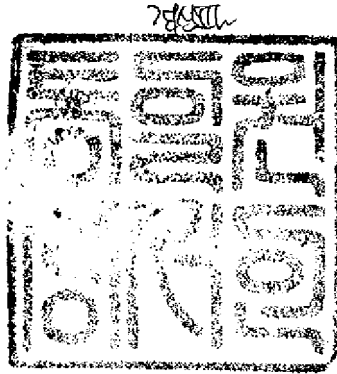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주년 기념》

세 미 나 회의 록

320-
320/2 (340.91.)



320
320

{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통 일 원
남북회담사무국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주년 기념 세미나의 내용으로서 정부의 공식입장이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혀둡니다.

목 차

1. 일반사항	3
2. 회의록	5
가. 부총리 인사말씀	5
나. 기조연설	7
다. 제 1 회의	13
라. 제 2 회의	66

1. 일반사항

가. 일 시 : '95년 2월 17일(금) 10:00~17:00

나. 장 소 : 남북회담사무국, 회담장 3층 대회의실

다. 주 제

[대 주 제] 김정일 정권 공식등장 이후의 남북관계 전망

[제 1 주제] 북한 김정일 정권의 정책 방향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를 포함하여

[제 2 주제] 우리의 남북대화 추진 방향

—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방안 중심으로

라. 참석자

○ 외 부 인 사 : 정원식 前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주제발표·사회·토론자 12명

○ 내부참석자 : 부총리, 차관, 남북회담사무국장, 상임·자문위원(7명), 회담협력관(2명), 기획부장, 운영 1·2부장, 연락부장, 홍보협력관, 기획·분석·정치·군사·사회문화·경제회담과장 및 관계관

마. 세부진행 내용

시 간	진 행 사 항
10 : 00 ~ 10 : 05	부총리 인사말씀
10 : 05 ~ 10 : 30	기조연설(정원식 前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10 : 30 ~ 12 : 30	제1회의(제1주제 발표 및 토론) <발표자> 서재진(민족통일연구원 북한실장) <사회자> 장달중(서울대 교수) <토론자> 김재홍(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문정인(연세대 교수) 이강석(국방대학원 교수)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12 : 30 ~ 13 : 30	점심식사
15 : 00 ~ 17 : 00	제2회의(제2주제 발표 및 토론) <발표자> 권만학(경희대 교수) <사회자> 마권수(KBS 통일부 차장) <토론자> 백전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신창민(중앙대 교수) 이장희(한국외국어대 교수) 유영구(중앙일보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위원)

2. 회 의 록

가. 부총리 인사말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기념 세미나의 기초연설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정원식 전 총리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3년전 남과 북은 민족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남북 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나가자는 민족공동의 합의인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 발효시켰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남북간에는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대화마저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남과 북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때 남북관계의 진정한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합의는 실천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나고 빛을 발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한낱 휴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합의서의 이행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2월 3일 북한에 제의한 내용들은 남과 북에 다같이 도움이 되고 북한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라도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시범적인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합심하여 어려운 문제가 아닌 쉬운 문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지향하는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은 그리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 앞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남과 북은 올해를 민족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남과 북은 기본합의서를 비롯한 기존의 합의를 차근차근 성실히 지켜 나감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고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남과 북이 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 실천 하는 길 속에 바로 우리 민족의 앞날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기념 세미나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를 되살리고 남북 관계개선의 길을 여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거듭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 조 연 설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하여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효된지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빈과 관계자 여러분!

저는 두가지 엇갈린 심정이 교차하는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하나는 분단 47년만에 처음으로 탄생한 역사적인 문서에 직접 서명한 당사자로서 당시 가졌던 벅찬 감격에 대한 선명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 남북관계가 한치의 진전도 없이 오히려 대결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아시다시피 남북기본합의서는 '89년 2월 이후, 8차례의 예비회담을 거쳐 '90년 9월부터 '92년 2월까지 6차례의 고위급 본회담과 13차례의 대표접촉 끝에 서명되고 그리고 발효되었습니다.

'90년 9월에 시작된 제1차 본회담에서 3차까지는 강영훈 전 총리께서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으며 저는 1991년 10월 23일 개최된 4차 평양회담때부터 수석대표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회담은 북한측이 『남쪽의 콜레라 발생』등의 이유를 들어 회담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제3차 회담이후 10개월 만에 열린 것입니다.

천만 다행히도 제가 참가하면서부터 분위기의 변화가 있기 시작하였으며 회담은 다소의 결실을 얻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4차 회담에서 우리측은 포괄적인 단일합의서로 『남북간의 화해·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여 합의서 명칭과 내용 체계에 일단 합의했습니다.

그후 쌍방 대표접촉을 계속하여 1999년 12월 13일 5차 서울회담에서 이를 채택하고, 3년전 2월 19일 6차 평양회담에서 발효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의 회담에도 계속 참여했습니다. 7차 서울회담에서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이행기구의 구성과 운영 문제에 합의하고 부속합의서를 발효시켰습니다. 그리고 8차 평양회담에서는 각 공동위원회의 제1차 회의 개최일자와 장소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남과 북은 화해·군사·경제·사회문화 등 각 공동위원회를 가동시켜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실천과제를 협의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저는 민족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북합의서가 발효되자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뜻있고 큰 일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남북합의서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실행되었더라면 지금쯤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진전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평화통일의 확고한 기반이 마련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의 감격과 오늘의 안타까움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역사적 의의를 다시 한번 짚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합의서의 첫째 의의는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간의 제반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남북합의서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책임있는 쌍방 정부 당국간에 채택된 공식문서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남북당사자가 직접 협의, 해결할 수 있다는 훌륭한 선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함을 밝히 놓았다는 점입니다.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존중하고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파괴·전복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남과 북이 적대와 대결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데서 비롯됩니다.

셋째는 남과 북이 무력침략을 하지 않으며,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비축소를 실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남북합의서가 이미 이땅의 '불안정한 평화'를 '확고한 평화'로 전환시킬 기틀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넷째는 경제를 비롯하여 사회문화의 각 분야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것으로 공존공영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북간의 사람과 물자와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 협력이야말로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두텁게 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다섯째는 평화통일의 기초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평화정착이나 화해협력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나아가 민족통일을 위한 대장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민족간의 성스러운 약속이자 책임있는 당국간의 확고한 합의이며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깊은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합의서의 채택과 발효에 대하여 온 국민은 환호하고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북합의서의 발효로 민족앞에 밝은 지평을 열 수 있는 굳건한 바탕이 마련되었음에도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

다. 기본합의서와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분명히 발효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의 핵문제가 돌출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크게 불안해지고, 한반도에는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자연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고 남북회담 석상에서는 북측대표가 『서울 불바다』의 험박적인 언사를 서슴치 않을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곡절 끝에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는가 싶었으나, 북한 최고책임자의 사망으로 이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해 중상과 비방의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네바 미·북 합의를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 다음에도 북한은 조문사과, 국가보안법 철폐등을 내걸고 우리 정부를 전복하고 타도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해 왔습니다. 경협확대조치를 취하는 등 우리가 화해와 협력의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원수에 대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늘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은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대립관계로 몰아 우리와의 대화를 기피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는 아직도 공식적인 권력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건 이는 일반적인 사회주의 독재국가의 권력승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 현상입니다. 왕조시대애나 볼 수 있는 『유훈통치』가 전개되는 가운데 망주의 유령이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북한은 우리와의 대화를 기피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허황된 상념만을 쫓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타개해야 할는지 우리 모두에게 고뇌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길은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남과 북이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의 대장전인 남북합의서를 이행해 나가는데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강조되지만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7천만 겨레와 세계 앞에 선언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북한은 이 합의서의 정신을 기저로 하여 그 내용 하나하나를 성실히,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도 즉시 가동되어야 합니다.

이제,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함에 있어서 남과 북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다시 확인해야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하여 다음의 네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민족의 가장 큰 사련이며 고통인 이산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일입니다. 기실 이산가족 문제를 외면하고 통일이니, 자주니, 민족대단결이니 운운하는 것은 민족에 대한 기만입니다. 남북사이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은 바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문제는 또한 인도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절박한 것입니다. 부모형제가 갈라져서 왕래는 고사하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경우를 인류역사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북한은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은 물론 그들의 생사 확인,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운영에도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북한이 대남 비방·중상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파괴·전복활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하여 구태의연한 대남비방이나 소모적인 선동채동을 고집하는 것은 남북간의 대결과 긴장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북한이 체제 불안의 원인을 애써 밖으로 돌리려 하거나 ‘광복 50주년’이라는 뜻깊은 계기를 악용하여 우리사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셋째로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직항로 개설 등은 남북간 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시키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포함한 경협을 크게 확대하는데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넷째로 남과 북은 현 정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한국을 제쳐놓고 평화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남북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남북사이에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과 북은 기본합의서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로 이미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북한의 여러가지 어려움도 한꺼번에 해결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남북당국간 대화를 기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와야 합니다.

남과 북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책임있는 당국간의 대화 뿐입니다. 민족간의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의 문제를 자주적, 평화적,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체는 오직 남과 북의 당국뿐입니다.

세계가 냉전의 낡은 굴레를 벗어버리고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마당에 우리 민족만이 분단반 세기가 다 되도록 적대와 대결을 지속하고 있는 현실은 실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민족적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하루라도 빨리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당국간의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이 모임이 갖는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두서없는 말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제 1 회(10 : 30 ~ 12 : 30)

-
- 주 제 : 북한 김정일 정권의 정책방향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를 포함하여
- 발 표 : 서재진(민족통일연구원 북한실장)
- 사 회 : 장 달 중(서울대 교수)
- 토 론 : 김 재 홍(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문 정 인(연세대 교수)
이 강 석(국방대학원 교수)
이 종 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강호양 : 남북회담사무국 기획부장 강호양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시어 본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세미나 진행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1주제 세미나를 하고 오후에 제2주제를 세미나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오늘 오전의 제1주제인 「북한 김정일 정권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회의의 사회를 맡으신 서울대학교 장달중교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장달중 교수님께서 주제발표자부터 소개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 : 장달중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오늘 이렇게 남북관계를 재조명해 볼 기회를 갖게된 것을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저희 세션에서 발표해주실 민족통일연구원 서재진 실장께서는 그동안 신문지상이나 여러 학술 논문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고 신선한 느낌을 주는 글들을 계속 발표해 오셨고 오늘 주제논문에서 아주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새로운 자료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토론자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왼편에 계신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께서는 국내학자중 북한의 주체사상, 이데올로기면에서 가장 권위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진학자입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북한 주체사상에 대해서 많은 논문을 발표해 주신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제 옆에 계시는 문정인 교수께서는 연세대학교를 나오시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고 계시다가 최근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돌아오셨는데 대외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우리나라의 정치학자로서 앞으로 우리 부총리님이나 외무장관을 지내신 한승주 장관이나 이런 분들을 대체해서 향후 우리나라를 해외에 소개하는데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선생님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문정인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계시는 서재진 실장이 발표하시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의 김재홍 차장께서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군사관계에 대한 많은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지금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으로 계십니다.

이강석 교수께서는 민·군 관계분야의 권위자로서 이강석 교수께서도 국내보다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많은 논문들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지금 국방대학원에 계십니다. 특히 남북통일문제라든가 북한의 군사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자로서 가장 많은 논문들을 영어로 해외에 발표한 학자중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주제발표자인 서재진 실장님과 이 자리의 여러 토론자들을 모시게 된 것을 저 자신 사회자로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의미있는 발표와 토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주제발표를 들은 뒤에 지정 토론자들께서 코멘트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남북회담사무국의 자문위원님들, 남북문제에 있어서 저희보다 더 전문가이시라고 생각되지만, 마지막에 코

멘트 해주시면 좋겠으며, 이에 대한 답변이나 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서재진 실장님의 주제발표를 듣겠습니다.

[주제발표문]

북한 김정일 정권의 정책 전망

서 재 진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실장)

1. 서 론

80년대말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이후 대외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북한이 취했던 대응책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은 일본과 수교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90년 9월의 3당공동선언 이후 1992년 11월까지 8차에 걸쳐서 수교회담을 추진하였고 1991년에는 유엔에 가입하였다. 둘째, 대남 적대정책을 지속해오던 북한은 남한과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1990년 9월부터 1992년 9월까지 8차례의 고위급회담을 지속하면서 남북간에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까지 채택한 바 있다. 셋째, 북한은 1991년 8월 나진-선봉지구 자유무역지대 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넷째, 북한은 사회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위기적 상황에서 북한이 대응책으로 내놓은 이 계획들은 사회통제정책을 제외하고는 1992년 말에 미국에 의하여 제기된 북한의 핵개발 의혹 문제로 전면 좌절되고 말았다. 작년 10월 21일 미국과의 제네바합의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핵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의 일탈자로 몰려 압력을 받았고 경제제재 조치가 직접적으로 취해지지 않는 않았지만 그에 버

금가는 국제적 고립을 당하였다. 그러한 와중에서 김일성이 사망하였으며, 정권교체기의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의 과도기적 체제단속 전략만이 북한의 정국을 지배하였다.

대내외적 위기상황 속에서 김정일은 20여년 동안이나 후계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식 지위에 승계조차도 하지 못하였다. 승계지연의 배경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김정일이 승계를 하지 못한 원인의 하나는 김일성의 축적이 워낙 깊어서 대중적 지지도가 낮은 김정일로서는 쉽게 승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 대내외적 위기적 상황 때문에 인민들에게 새 정권의 새로운 희망을 약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월의 김일성 생일과 4월 말의 평양축전을 전후하여 북한은 김정일 시대로의 진입을 본격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정권의 출범이 임박한 시점에서 우리의 관심은 김정일 정권이 어떠한 방향의 정책을 선택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승계하게 된 것이 김일성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김일성 시대의 연장이 될 것인지, 또 아니면 김정일 이후의 새로운 시대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에 불과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글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김정일 정권이 어떠한 방향의 정책을 구사할 것인지를 분석한 후 우리의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2. 김정일 정권의 성격

김정일 정권이 어떤 방향의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는 김정일 정권이 가지고 있는 몇가지 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규정당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의 성격을 간략히 규명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가. 권력유지 방식의 특수성

북한 김일성의 권력유지 방식은 스탈린주의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일성은 소스탈린이었다. 스탈린 사후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배이념은 수정주의화 또는 脫스탈린주의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반하여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가 다원화될수록 주체사상이라는 이념을 창출하여 전형적인 스탈린주의를 고수하였다. 스탈린의 우상숭배를 비판한 후르시초프가 김일성의 우상숭배에 대하여도 비판하자 김일성은 정치적 내정간섭이라고 매우 노골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수정주의를 막기 위하여 더욱 문을 굳게 닫아 외부의 바람을 차단하고 체제를 더욱 경직화하였다. 김일성에게는 개인숭배 비판운동과 수정주의가 북한에 침습되지 못하게 하여 정권을 수호하는 일이 지금까지 폐쇄주의를 고수해온 이유이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이란 곧 차단과 단절의 이데올로기이다.

특히, 80년대 후반 동구사태 이후 소련의 강경보수파가 주도한 쿠데타가 시민의 저항으로 실패하고 공산체제가 종식된 후 북한의 폐쇄화 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여 폐쇄주의 노선을 더욱 강화하였다. 소련과 동구의 공산당을 몰락시킨 자유화 바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외부바람'을 막기 위해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 관한 자료를 모두 회수,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김정일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모순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권력유지 방식은 김일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첫째, 외부의 자유화 바람의 침습을 막기 위하여 외부정보의 차단과 단절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정일 정권의 또 하나의 특징인 김정일 개인숭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이미 자기의 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우상숭배 방식의 통치를 지속하겠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위의 두 가지 특성이 권력유지를 위한 기본적 요구(imperative)이기 때문에

폐기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의 기존의 권력유지 방식이 지속되는 한 북한의 개혁 개방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 남북분단과 적대관계

북한의 대내외적인 정책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북한이 남북으로 분단된 대결구조 속에 처해있다는 사실이다. 이 분단의 요인은 비슷한 경험을 가졌던 동독, 베트남에서도 비슷하게 작용하였다. 동독은 서방의 강대국으로 성장한 서독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독의 문화적 침투 등 화평연변의 명령에 시달리다가 결국 서독에 흡수되고 말았다. 베트남은 분단 이후 30여년의 내란을 치르다가 통일을 이루어 분단문제가 해소된 이후인 1979년 9월 당 중앙위 6차총회를 기점으로 비로소 적극적 개혁 개방으로 정책선회를 할 수 있었다.

북한은 분단의 상황 때문에 경제발전이 전념하지 못하고 국방 경제 병진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잠재력을 엄청나게 소모하여야 했다. 또한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비효율성이 확인된 시점에서도 사회주의 이념을 변화시켜 체제효율성의 개선을 시도하기가 어려운 까닭도 남한과의 체제경쟁을 의식한 자존심 때문이다.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더라도 남한과의 체제경쟁의 조건에서는 인민들에게 충격적인 정보가 유입되지 않는 방식의 전략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분단상황은 지금까지도 강력한 정치적 통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으로 적극 활용되었기 때문에 대내 개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 사회주의체제 개혁 개방이 준 결과에 대한 인식

김정일 정권의 정책방향을 규정하는 또 하나의 변수는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이 가져온 결과이다. 북한 지도층이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중요한 교훈은 개혁은 예기치 못한 결과

를 가져올 수 있고 더욱이 개혁을 시도한 지도자에게 반드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1989년 북경 천안문사태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경제활동을 부추기는 것만으로도 黨의 사회통제력이 약화되고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가 증대되는 결과를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의 처형, 동독의 호네커의 망명, 레닌 동상의 철거 등은 김정일에게 개혁 개방 공포증을 유발함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북한의 지도부는 북한과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소련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의 필요성은 당국이 범한 실수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 지도자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하거나 정정할 것이 없으며 북한의 체제는 강하고 단일화된 당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인민들은 독창적이고 가장 발달된 이념체계를 제시한 위대한 지도자 밑에 결속돼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은 모두 체제를 경직시키는 요인들이며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적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제한시키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 개방의 폭을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3. 대외정책 전망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북한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큰 부문이 대외협력 관계이다. 사회주의권이 사실상 없어진 상황에서 북한이 취해야 할 당면한 정책의 방향은 일부의 자본주의 국가와 관계를 개선하여 경제협력 상대를 새로 창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반응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난 부문이 대외정책이었다. 북한은 1991년에 유엔에 가입하였고, 남한과 1년여 동안의 고위급회담을 통하여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기까지 하였다.

북한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대외정책은 일본과의 수교협상이었다.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를 국제고립 탈피 및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마스터카드로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으로부터 50억 달러 규모의 보상금을 획득할 수 있고 자본과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듯하다. 1990. 9. 24 북 일 간에 3당공동선언이 있은 후 8차례의 수교회담을 통하여 수교문제가 급진전되었으나 북한의 핵개발의혹 문제가 제기되자 수교협상은 중단되었다. 핵문제가 북 미간의 문제로 확대되자 북한은 핵문제를 오히려 카드화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질서의 해계모니는 미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통하지 않고는 일본과의 수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40여년 동안 적대관계에 있었고 핵문제로 침예한 대립을 경험했던 미국과 일련의 고위급회담을 통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2년 동안 끌어왔던 핵문제를 매듭짓고 대화와 타협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북미간 핵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북한은 외교대표부 개설, 경수로 지원 및 대체에너지 공급 등의 합의를 받아놓고 있다. 북한은 이를 기회로 경제난을 해결하고 체제유지에 필요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북미관계의 대체적인 방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교역 및 투자장벽을 부분적으로 해제하고 연라사무소를 교환설치하는 등 정치경제적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다.

미국과의 핵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룩한 북한은 이어서 일본과의 수교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대외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하기만 하면 서방과의 관계를 더욱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회생을 위한 대외환경은 조성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망해 볼 때 북한 신경권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둘 것임을 감안한다면 핵활동의 동결에 관한 미국과의 합의는

대체로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양국관계는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다만 미국내 북한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감을 갖고 있는 인사들의 유보적 자세(특히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의회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 공화당의 보수 견해)는 북미관계 개선의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대외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일 정권은 기존의 '통제된 개방정책'을 확대하고 대미 대일 관계개선에 주력하는 이른바 '실용주의적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제적 고립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중, 러의 대한수교 등 주변정세의 변화 속에서 대미 대일 관계개선이 북한의 경제난 회복과 군사적 고립타개에 기여함으로써 체제유지 및 정권안정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대미 대일 관계정상화에 사활을 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조만간 관계정상화를 위한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게 될 터인데 이는 김정일에게 국제적 위신을 높여주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국민들에게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그들 나라들과 공식적인 적대정책을 포기하여 경제협력을 얻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들 나라에 대하여 인적·문화적·사회적 교류를 전면 개방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4. 대남정책 전망

김정일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는 대남정책의 방향이다. 남북분단은 지금까지 김일성 정권을 유지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의 편입이 불가피한 현실시점에서는 남북관계가 김정일 체제에 가장 부담스러운 과제가 될 것이다. 남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일시적으로는 경제회생에 도움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유화바람이 유입되어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긴장관계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체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경제회생에 장애로 작용하여 결국 체제변화를 촉진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으며 대결상황을 유지하는 쪽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미제국주의'와 남한에 대한 비난으로 체제를 유지하던 북한이 남한에 대한 적대주의를 폐기하면 체제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외부의 적이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이 주적이라는 전략을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정권 출범직후 한동안 대남비방을 자제하던 북한이 얼마후 재개하여 더욱 강도를 높인 것은 북한사회 통합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비방은 남한과의 대결이라기 보다는 북한내부의 사회통제를 위한 내부용이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

지금까지 북한은 남북대화나 남북관계 개선을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도구나 협상카드로 활용하였다. 1991년 말에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북한이 일본과의 수교를 적극 추진하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1989년 2월 28일~1990년 7월 26일 사이에 8차례의 예비회담과 2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 문제를 협의할 것에 합의한 이후 1990년 9월~1992년 9월까지 8차례의 고위급회담을 지속하면서 남북간에 기본합의서 채택, 부속합의서 채택까지 한 바 있다.

북한은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본과의 수교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었다. 북한과 일본간에 1990년 9월의 3당공동선언 이후 1992년 11월까지 8차례 걸쳐서 수교회담을 추진한 바 있었다. 그러나 회담은 핵문제의 돌출로 받

미암아 결렬되었다.

따라서 1991년 12월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게 된 배경은 남한과의 관계개선 보다도 당시에 일본과의 수교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지극히 단기적인 전술적 의도에서 응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현상황에서 남북간에 합의된 기본합의서는 아무런 역할도 효력도 없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북한에게는 당시의 북한이 의도했던 일본과의 수교를 진전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만 의미가 있었던 것이었다.

작년 6월에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김일성이 우리측 제의를 수락하여 정상회담을 7월 25~27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당시 북한이 IAEA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상태에까지 봉착하게되자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상회담 카드는 남북간에 관계개선을 희망해서라기 보다는 북한이 그 당시의 핵협상의 불리한 국제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결국은 카터 김일성회담과 남북 정상회담개최 합의를 계기로 북 미 핵 협상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던 것이다.

이제는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해야 할 구체적인 유인요인이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당분간 남한측의 관계개선 요구에 응하기 보다는 남한에 대한 적대감을 지속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쌍무적인 평화협정 체결, 비전향 장기수 송환, 한국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는 한편,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의 장애라고 거론해왔던 몇몇 사안들을 집요하게 들먹이면서 남북대화 단절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선전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한에서는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부처간, 정당간, 정부와 사회세력간 정책대립이 표출되는 바, 북한은 앞으로도 중요한 쟁점에 대한 남한정부의 정책대립을 유도하여 사회혼란을 조장할 것이다.

북한은 대남 통일전선전술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대남 통일전선전술

의 핵심적인 구호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과거의 군부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겨냥한 반파쇼민주화투쟁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과의 의존적 관계를 겨냥한 반미 자주화 민족주의이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민주화라는 구호가 실득력을 잃게되자 반미 민족주의를 주요 대남전략의 구호로 활용하고 있다. 1993년 4월의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나 최근의 대민족회의 참여 제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은 대미관계에 있어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미관계 진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미합의 이후 미국 및 일본, 한국정부가 남북관계 진전 없이 북·미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단히 강조해왔다. 이러한 한·미·일의 합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5일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공동제안 형식으로 상 하 양원에 제출한 대북결의안의 핵심은 미국과 북한간 핵합의 이행과 남북한간 관계 진전이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일본과 한국 양국은 2월 13일에 북한의 제네바합의 이행과 북한 일본 수교를 사실상 연계하여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받아들여 경수로 공급 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북·일 수교협상을 재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또 북·일 수교협상이 재개된 후에도 남북대화 재개 등 북한의 제네바합의 이행과 수교협상의 진전을 병행키로 합의하였다(동아일보 1월 13일자).

또한 미국이 제네바합의 이행의 일환으로 취한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도 남북관계 개선을 회피하는데 대한 한·미간의 공조체제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유효하다.

이러한 압력에 대하여 북한은 핵협상 메와 같은 강력한 협상카드가 없다는 것이 북한이 직면한 문제집이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는 남한과의 대화 없이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북한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시늉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북한이 앞으로 상당기간 활용할 대남정책의 방향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대체로 해외동포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과는 당국간 공식적 경제관계는 가급적 피하겠다는 것이다. 비공식적인 방법의 경협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나진-선봉지역에 한정할 가능성이 높다.

5. 경제정책 전망

지난 수년 동안 북한의 최대 정책과제가 체제고수였다면 이제는 경제회생일 것이다. 사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이 붕괴하여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진 1989년 직후 북한이 취했던 정책방향의 핵심은 위기에 처한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이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중국의 경제특구식 개방모델을 일부 도입하여 나진-선봉 지역에 자본주의적 경제특구를 건설하고, 일본과 수교를 추진하여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배상금을 도입하여 경제를 회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북한의 계획이 핵문제의 돌출로 실행되지 못했던 것이다.

지난 연말에도 북한은 당중앙위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제3차7개년 경제계획의 실패를 인정하고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채택 등 경제회생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이 당장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나진-선봉 지역에 경제특구 건설을 통하여 외자유치를 활성화하고 금강산을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하는 등 제한된 지역을 개방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 수년 동안 북한이 보여왔던 철저한 폐쇄주의는 어느정도

완화되겠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에 분호를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시장제도나 소유제도의 도입과 같은 체제개혁을 추진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시기상조이다. 특구이외의 지역에서 자본주의적 시장메카니즘의 도입, 또는 토지의 사유화와 같은 제도적인 변화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본주의적 제도 도입은 북한주민들의 의식에 충격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부르조아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변화는 억제할 것이다. 김정일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의 회생보다는 김정일 정권의 안정된 유지일 것이다. 핵분제가 돌출되기 이전에 북한이 추구했던 정책방향이 이제 비로소 본격 실행되게 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북한이 취할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사회주의체제와 기존 정권을 유지하면서 경제정책 변화를 추진하는 유형에 더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도 훨씬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변화만을 선택할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정책들을 모방하여 왔고 중국지도부의 조언에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김정일이 중국의 호요방을 만났을 때 호요방의 관광개방 요구에 다음과 같이 '약속'한 것으로 진술한 바 있다: "우리 개방정책 이제 하겠다. 개방정책 하겠는데 제한된 국부적인 근데만 하겠다." 이러한 모델의 개혁 개방은 이미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은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의 건설과 UNDP 주관의 두만강 개발사업이다. 북한은 이들 지역에 대한 외국의 투자유치를 위해 1992년 4월에 개정된 헌법에도 대외경제협력 관련 조항을 첨가하였으며 조선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 16개의 관련 법안들을 이미 마련하였다. 이러한 법적 제도화의 내용은 1980년대의 합영법보다는 훨씬 진전된 것임은 사실이다.

북한이 제한된 일부지역이기는 해도 자유무역지대내에 자본주의제도를 도입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의미있는 정책전환임에 틀림없다. 당분간은 나

진-선봉 지역에 한정되겠지만 남포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 북한의 지도부가 의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은 어느 정도의 전환점을 맞고 있음에 틀림없다.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에 대한 댓가로 1994년 말까지 5만톤을 시작으로 매년 50만톤 상당의 중유를 북한에 공급하겠다고 합의하였고 이미 약속한 대로 3개월 이내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일본 역시 나진-선봉 지역내 입가공 및 광산개발, 사회간접자본 개발 등의 경제진출을 위해 수교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수로건설 지원과 대체 에너지 제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일본과의 수교협상이 추진될 경우 50억 달러 정도의 배상금이 북한에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제난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기업도 부분적으로 대북진출을 준비하고 있어서 북한경제의 회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가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을 통해서 경제 효율성이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단기적으로 정권안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의 통제와 폐쇄정책이 경제회생에 부정적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구상하고 있는 개혁과 개방 정책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며 경제효율성 개선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나진-선봉지구에서 어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겠지만 사회간접자본(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미비로 인해 공장가동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외국기업의 진출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은 상당한 체재적 위협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정권유지를 위한 우상숭배 및 폐쇄주의의 전략, 분단체제의 한계, 개혁 개방한 사회주의권이 보여준 혼란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체제개혁을 동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체제개혁을 수반하지 않은 채 한정된 지역에 개방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

는 한정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개방정책이 국내기업에 생산 및 경제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과급효과를 미치지 못한다면 유치된 외국기업의 생산력이나 외화가득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게 된다.

사회주의체제의 비효율성과 인민들의 근로의욕 상실 때문에 경제쇠퇴가 가중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개혁이 없이 나진-선봉 등 제한된 지역에 외부 자본을 도입하여 경제를 치유하겠다는 김정일의 구상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북한이 보다 본격적인 개혁 개방을 추진하기까지는 현재의 소극적 정책의 시행착오를 한번 더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6. 사회통합 정책 전망

김정일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의 하나는 주민의식의 변화이다. 주민들의 사회의식이 변화한 것은 외부로부터 스며들어온 바람의 영향도 있지만, 경제가 침체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생계획득의 자구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봄으로 인한 체험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 주민의 사회의식은 1980년대 후반 들어 식량과 생필품이 부족하게 되자 부족한 생필품 확보를 국가에 기대하기 보다는 개인 스스로 독자적으로 책임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게되면서 크게 달라졌다. 즉 암시장 및 지하경제의 선호, 화폐에 대한 가치 변화, 개인소유주의, 그리고 뇌물의 성행, 절취(pilfering)의 일상화 등 개인주의와 불질주의가 확산되었다. 이전에는 북한 주민의 지배적 가치는 정치적으로 인정받아 공적 부문에서 출세하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돈을 버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확산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와 일탈행위의 확산은 단순히 사회적 병리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사회변동의 지표이다. 북한에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이 국가의 공식 분배통로를 통하여 인민들에게 공급되지 않고 암시장

으로 흘러나가는 등 이미 유통구조에 자본주의적 요소가 대동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에서는 자본주의적 제도를 도입하는 체제개혁을 기피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이미 체제개혁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암시장에서 경제행위를 하기를 선호하고 개인주의에 탐닉하는 사람들은 전체인구의 60%에 가까우며 약 40%의 주민들만이 체제에 통합하여 기존체제를 지탱하고 있다. 이것은 80년대 후반 이후 급속하게 변화한 수치이다.

북한 주민의 정치의식은 집단간에 큰 차이가 있다. 북한주민은 신원문건에서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잡한 군중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들 세 집단은 정치적 의식에 있어서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군중과 기본군중은 대체로 북한체제에 통합하여 높은 지위를 얻음으로써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들로서 체제를 지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이다. 그들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와 김정일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무모한 것이기 때문이다. 철저한 감시와 무자비한 처벌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오랫동안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교육과 김정일의 교시에 대한 학습의 효과 때문에 김정일의 지시는 대체로 옳다고 본다. 김일성에 비하여 김정일의 권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일에 대하여 비판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김정일에 대하여는 대체로 매우 무서워하고 있다.

50대 후반의 사람들은 김정일에 대한 평가가 젊은 세대보다는 부정적이지만 젊은 세대는 김정일을 당연한 후계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40대 이하의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김정일은 이 세상의 전부이라네”라는 노래를 당연시하고 자연스럽게 부르곤 한다고 한다. 김정일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한다. 개인의 어려움이나 불행에 대하여는 팔자탓으로 돌리며 제도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고 한다. 다른 교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다른 경험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외국의 신문, 잡

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어떠한 다른 정보도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써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핵심군중과 기본군중의 중간간부들에 대한 불만은 매우 심하다고 한다. 그 불만의 대상이 김정일이나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라 중간간부라는 점에서 이중적이며 김정일에 대한 외양적 순종이다. 가령, 옛날보다 못산다는 불만을 할 때 그것은 김정일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중간간부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김정일 밑의 간부들이 김정일의 지시를 옹기 이행하지 않으며 이기주의와 부정부패에 탐닉해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간간부들이 위로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며 자기욕심, 진급에 급급하기 때문에 북한이 못산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복잡한 군중”의 경우는 불만의 경우가 더욱 심하다. 기본군중처럼 체제에 통합되어 정치적으로 인정받아 출세하기 보다는 개인주의적 실용주의에 탐닉해 있거나, 유학생이나 성분불량자처럼 체제로부터 이미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외국경험을 한 사람들은 대체로 북한체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복잡한 군중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은 가족 중에 김정일의 통제정책에 위반자로 걸려 피해를 본 사람들,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김정일에 대하여 비판은 못하지만 속마음에서 김정일을 존경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김정일에 대하여는 감히 비판을 못해도 중간간부들에 대하여는 매우 적대적이다. 간부들에 대한 불평불만은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옛날에는 찾아볼 수 없던 저항적 행동이 일상생활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된다고 한다. 식량배급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면 배급소에 주민들이 몰려가서 항의하고 배급소 유리창을 부수곤 한다고 한다. 당간부들이 간부직위를 악용하여 다 떼어먹고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면서 분개하여 저항한다고 한다. 암시장에 물건을 거래하는데 안전원이 장사를 못하게 하거나 좌판을 뒤집거나 물건을 뺏으면 안전원을 구타하거나 노골적인 반항을 한다고 한다. 나라에서 먹고 입을 것을 안주는데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면서

반발을 한다고 한다.

복잡한 군중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집단은 외국경험을 한 유학생, 일부의 무역기관 종사자, 별목공 등이다. 북한에서는 좋은 아이들 외국유학 보내면 완전히 반동이 되어 돌아온다고 한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는 유학생들에 대해 감시원 1명을 붙여 유학생 출신간 접촉, 해외복격내용 발설 여부 등을 중점 감시하도록 하면서 6개월 마다 1회씩 집체사상교육을 시키고 신원문건에 “유학생출신”임을 기록, 소속직장 당세포와 주거지 인민반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당국에서는 성분이 제일 나쁜 것으로 분류하여 문건에 기록하여 간부로 동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북한에는 이미 체제비판의 싹이 트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본군중의 경우는 비판의 화살이 김정일에게까지는 아직 미치지 않지만 간부들을 겨냥한 비판은 외부의 자유화바람이 조금만 더 들어오거나 현재의 의식에 질적 변화가 생기면 시간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정보차단, 폐쇄주의가 지속되는 한에서만 유지되기 때문에 개방을 하여 외부의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매우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체제가 위기에 처해있는 대외고립 문제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지난 수년 동안 계속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라는 미명아래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이러한 사상동요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은 암시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의 非社會主義的 현상의 확산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규제조치를 취하였다. 첫째, 북한은 암시장 성행의 근본 원인이 되는 중국 상인의 유입을 통제하고자 시도하였다. 중국 동포들이 북한거주 친척 방문을 이유로 북한을 방문, 한국 상품을 비롯한 외국상품을 공공연히 반입하여 밀매하고, 주민들에게 외국소식을 전

해주는 정보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1991년 경에 중국인의 장사를 금지시킨 적이 있다. 이 조치에 대해 중국상인들이 무산 那 黨廳앞 앞에서 항의시위를 했고 또한 중국의 길림성 당국도 항의를 하자 다시 중국인의 장사가 재개되었다고 한다.

둘째, 북한은 '비사회주의 (타파) 그루빠'를 조직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비사회주의 그루빠는 한 중수교 직후인 1992년 10월 김정일의 지시로 평양을 비롯한 각 시, 도 지역별로 검찰, 사회안전부, 당위원회, 사로청, 職盟 등 5개기관에서 각각 同數의 인원을 차출하여 구성되었다. 특급기업소의 경우 약 30명, 접경지역인 신의주에는 큰 기관이나 기업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총 300명 규모의 그루빠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기득권층의 방해로 실패하고 1993년 말에 해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비사회주의 그루빠'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 도별로 '마감총화'를 실시하고 이 사업을 끝마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 사업전개 1년여 만에 이 조직의 활동을 사실상 중지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비리를 케면 켈수록 간부들의 비리가 고위층 간부에게까지 확산되었음이 확인되고 동시에 인민들에게 간부들의 비리가 알려지게 되자 김정일의 지시로 그만두었다고 한다.

또한 '그루빠' 요원들이 실적 위주로 일을 추진하여 10여년 前 사건을 분제삼아 주민들을 마구 체포하는가 하면 주야간을 막론하고 사부실, 작업장과 일반 가정까지 불시에 들어닥쳐 주민들의 생산품 절취여부 및 불밥 거래, 한국산 불뿔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고 이를 구실로 각종 뇌물을 수수해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비사회주의 그루빠 활동에 대해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른 간부층은 제외된 채 먹고 살기 힘들어 할 수 없이 법규를 어긴 일반 노동자들만 애꿎게 처벌을 받았다"는 등으로 비판하고 있어 이 사업을 서둘러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북한은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사회통제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폐쇄주의와 사상통제 등 사회통제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통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김정일의 위상화 작업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최근에 김정일의 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결정한 것은 사회통제를 위한 일인독재체제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7.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대북정책 수립에서 고려해야 될 네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 첫째는 남북관계는 절대로 북한당국 단독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측과 주변 강국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국제사회에 편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북한의 협상력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북한은 힘이 약한 제3세계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제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시작으로 서방세계에 참여하는 만큼 지금까지와 같은 자력갱생적인 외교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미국, 일본 및 중국과 협력하는 정도에 따라 경수로 문제 등의 의제와 관련하여 북한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경수로 로형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강력한 협상카드가 없다. 경수로형 선택의 열쇠는 한국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북한이 수용하도록 할 수 있다는 대북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처럼 북한의 태도에 따라 우리의 대응방향을 결정하는 수세적인 대북정책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하여 북한이 우리의 정책에 적응하게 하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시적인 대북정책의 틀을 설정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일이다.

둘째는 한반도에 탈냉전의 상황을 촉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냉전을 지속하여 남북간에 긴장이 지속될 때 체제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에 북한의 적대정책에 대한 우리의 적대적 호응은 북한의 장단에 춤추는 격이 된다.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대북정책 방향은 화해의 제스처

를 보내는 것이다. 적대적인 대북정책보다는 포용적인 접근이 북한이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전략이다. 지금까지 핵문제를 둘러싼 남북간의 긴장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협상을 계속할 수 있게 하였고, 대남비방을 계속하면서 체제내부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는 통일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통일은 20~30년의 기간을 요하는 장기적 과제이다.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와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당장 북한체제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인 판단이다. 당장의 통일보다는 통일기반 조성이 현안문제인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이 당장 붕괴할 것이라는 가능성없는 가정에 기초한 통일정책보다는 북한을 점차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는 정책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단기전략보다는 장기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는 대북정책의 방향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는 쪽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북한사회는 기본군중과 복잡군중의 이원화된 주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복잡한 군중의 비율이 1989년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통일정책의 방향은 이러한 복잡한 군중의 비율을 확대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주민들은 김정일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고 있으나 중간간부에 대한 비판은 거리낌없이 행한다고 한다. 이것은 북한주민들이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위험성이 덜한 중간간부를 비판의 타겟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침체와 더불어 90년대 들어서 급속히 변화하는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현상고수에 집착하는 지도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협 등의 방법으로 남북간의 교류를 증대시켜야 한다. 교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은 경제협력이다. 중국의 개혁 개방이후 조 중국경을 통한 인적 왕래, 상품 및 정보의 유입이 급증

하였고 그것이 북한주민들의 의식구조 및 주민생활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큰 것이었다. 따라서 남북간에 경제교류, 인적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그것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에 미칠 영향은 대단히 클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결코 호응하기 힘들겠지만 우리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제의를 해야하며 그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유화분위기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남북간의 화해국면이다. 따라서 화해제스처가 가장 효과적인 대북전략이다.

사 회 : 서재진 실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12시 30분 까지이고 이제 약 1시간 30분 가량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외부에서 오신 분들만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이자리에는 그동안 남북대화에 실무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에 오래 관여해 오시고 또 주도해오신 정시성 남북회담사무국장님도 계시고 유완식 선생님, 정석홍 선생님, 양영식 선생님, 이준구 부장님, 다 계시는데 일일이 소개를 못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이론적으로 매크로한,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들을 토론과정에서 교정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아까 소개드린 순서와 반대로 국방대학원의 이강석 교수님부터 해주시는데 한 분이 10분을 넘지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석 :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를 드릴 기회를 못 얻었습니다. 지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통일원의 국장님들과 부국장님들은 대개 우리학교를 거쳐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으신 분들도 머지않아 국방대학원에 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원에 계신 국장님들, 부국장님을

뵈게되면 부조건 우리학교 왔다 가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서 악수도 하고 인사를 드리곤 합니다. 그러다보면 다녀 가지지도 않은 분들을 붙들고 반갑다고 막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차피 앞으로 다 알고 지낼 사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녀가신 국장님들, 다시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발언 허용 시간이 10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때에는 이야기를 하다보면 시계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서제진 박사의 논문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평소 서제진 박사님께서 쓰시는 글을 아주 즐겨 읽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항상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면에서는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은 되도록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만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토론이 되고 나중에 논의를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서제진 박사님의 논문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북한이 개방을 한다든지, 화해쪽으로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잘못하면 흔들리게 될 위험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단히 제한적인 것이고 경제지원을 받기 위해서 개방을 외치는등 제스추어를 취하겠지만 별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인데, 상당히 잘 보신 내용이고 동의를 합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엘리트 계층, 소위 김정일을 추종하는 지도부의 사람들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구의 공산권들이 다 무너지고 또 중국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김정일 추종자의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종자들끼리 내부에 어떤 분열이 일어난다든지 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뚫뚫 뭉쳐야 살지 자기들끼리 분열하면 와해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은 자기네들끼리 뚫뚫 뭉쳐서 공동운명체적인 의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자기네들이 같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뚫뚫 뭉쳐서 자기들 정권의 안정을 추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내에 크게 노선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서재진 박사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밑에서 민중 혁명이 일어나서 동구라파의 차우세스쿠 경우처럼 뒤집어 엎는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 그동안 잘 통제를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일탈행동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사회체제이기 때문에 밑에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상당기간동안 안정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간이나? 제가 감히 한번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만 적어도 2,004년까지는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서재진 박사하고 의견이 다른데, 핵문제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제한적인 개방을 한다면 핵문제에 관한 투명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한적인 개방이기 때문에 핵문제에 관한 한 제한적인 노출을 시킬 것이 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모든 분야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제한적으로 할 것이고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체제는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독 핵문제만은 지금 우리가 북한을 상당히 믿고 있습니다. 미·북 핵협상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미국 사람들이 하는 접근이 상당히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한국형 원자로를 저쪽에서 받아주고 남북대화가 잘 진행이 되면 이것이 풀릴 것이다. 이

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대단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우리의 대북 정책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한적인 개방을 한다면 핵문제도 상당히 제한적인 노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핵문제가 어떻게 풀려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정부측에서 세계화 정책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내놓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하게 접근하는 정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과연 제한적인 개방을 할 북한이 핵문제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충실히 협상내용을 이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측에서도 미국이 하고 있는 접근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세계화 정책하고 연계해서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낸다,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합의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끌어내면 핵문제도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풀리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지원도 해주고 교류도 하고 협력한다, 아까 정원식 前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이 이쪽에 대해 온갖 비방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쪽을 지원해 주어야 북한이 책임있는 행위자로서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헛별논리고 만행론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서재진 박사도 그 방식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우려의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부측에서도 이런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온통 분위기가, 핵문제에 관한 한 잘 풀릴 것으로 모두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 잡잡합니다. 전혀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외신이나 외국의 논평들을 보면, 우려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정부나 언론에서 여론을 주도해 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 나온 여러가지 논쟁중에서 한 사람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앤드류 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전에 쓴 글에 의하면 북한이 과연 경제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경제적으로 풍요해져야 되겠다고 하는 동기 때문에 핵 문제에 응했느냐, 아니면 생존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안보 문제로 인해서 생존 문제로 해서 미·북 핵 협정에 동의를 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경제발전이라면 미국이 지금 하는 정책이 옳고 또 한국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옳다 이거죠. 어차피 합리적으로 행동해서 북한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끌어내면 핵문제는 자연히 풀릴 것이다, 북한이 경제지원을 엄청나게 원하고 있고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에 있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앤드류 맥에 의하면 그게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최소한 북한은 안보의 생존의 이유 때문에, 그 사람 말로는 Bottom line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으로 최악의 경우에 들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미·북 핵 협정에 서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과연 경제발전이 중요한 동기였나 하면 아니다 이 겁니다. 이 사람 이야기로는 체제가 흔들려서 무너지는 것보다는 지금 통제 장치가 대단히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적당히 북한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살 수 있는 정도로 수준을 유지해 주면 북한사람들의 경제문제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정권자체의 생존문제를 위해 북한으로서는 최소한의 수단, Bottom line이라는 게 필요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핵무기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경제적인 이유라면 아예 처음부터 특별사찰을 받겠다고 나오면서 특별사찰과 경제지원하고를 맞바꾸어 처음부터 엄청난 돈을 받아야지 5년 후에까지 끌고 갈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람

견해를 보면 핵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북한은 5년후에 특별사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5년후에 만약 특별사찰을 받아 그 동안에 미국 중앙정보부나 외부에서 거론된 적이 있는 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게 되죠. 북한이 한개 내지 두개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과거 미국 CIA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합의가 되고 나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이야기는 아예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만약 5년후에 특별사찰을 받아서 한개 내지 두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든지, 더 나아가서 1~2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 5년후에 드러났을 경우 북한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 경우 북한은 재협상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즉, 북한이 정수로 지원 등 받을 것은 다 받고 미국과 재협상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의 파키스탄과 같이 1~2개를 북안해주는 상황으로 같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한국은 뭐냐 이거죠. 우리가 30억불을 지원해서 경수로를 건설해 주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남북대화도 만약에 북한이 남북대화를 다른 목적을 위한 하나의 부속수단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게 됩니다. 그렇게 쉽게 풀리겠느냐 이겁니다. 논문에서는 쉽게 풀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염려가 제기되기 때문에 서제진 박사와 의견을 달리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문제를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토론해 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 : 네, 감사합니다. 남북관계의 Key Issue가 되고 있는 핵문제의 전망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셨고 이 결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이강석 박사님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 동아일보의 김재홍 차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김재홍 : 주제 발표를 하신 서재진 실장님의 페이퍼 순서에 맞춰서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추가할 수 있는 제언이라든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크게 나누면 북한 내부의 문제, 이 논문에서는 지금 김정일 정권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대외정책과 대남정책의 우선 순위와 기조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있고, 끝으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대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제언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내부 문제를 보았을 때 김정일 정권의 성격이 자기 아버지가 이끌어 왔던 권력체제의 연장이나, 그것도 단순연장이나 아니면 자기시대를 새로이 개척하느냐 또는 전이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은 저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바로 어제가 김정일의 53회 생일이었는데 2월초까지만 해도 정부 당국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관측통들은,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3회 생일은 북한정권이 아예 치르지 않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규모와 약식형태로 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과 효도심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김정일 정권을 이끌어나가는 데 중요한 정치적 권위의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효심과 충성심을 연출·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래서 김정일의 생일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2월 10일경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 13일부터 김정일 생일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사실 굉장히 크게 치러졌습니다. 우선 민족최대의 명절로 지정을 했고, 지난 13일에는 인민문화궁전에서 박성철 국가부주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일 생일 중앙 연구 토론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관 단체별로 행사를 이끌어 갔습니다. 15일에는 전야제 비슷하게 오후 4시경부터 김정일 탄생 53주년 경축 중앙 보고대회라는 것을 가졌는데 이것은 최초의 김정일 생일행사 또 중앙보고대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응태 정치국 위원 겸 당 비서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물론 김일성의 유언을 받들어서 주체 혁명을 완수해 가는 게 기조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김정일의 인덕 정치, 광폭 정치, 애민 사상이 발현되어야 된다고 한 시간 이상을 보고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는 언론에서도 처음에는 김정일 정권이란게 새시대의 의미보다는 자기 아버지가 이끌어 온 체제를 연장시키는 형태가 될 게 아니냐 그것도 김정일에게는 조금 박찬 게 아니냐는 분석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생일행사를 보았을 때는 김일성 정권의 단순 연장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제진 실장님이 세가지 제시한 것 중에서 그래도 자기 아버지 정권을 단순하게 끌여가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개혁·개방 정책을 포함해서 자기 시대를 새로이 개척해 가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대외정책과 대남정책의 우선 순위 문제인데 말할 것도 없이 대외정책 우선으로서 과거의 주적이었던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경제개방 개혁개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이강석 교수님께서서는 그것이 북한 체제의 생존을 위한 것이냐 경제개발 개혁·개방정책을 위한 것이냐는 여러가지 관측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은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상황에서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 서방의 돈을 받아서 쓸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정한 것 같이 보입니다.

서실장께서 발표하신 것을 보면 크게 91년 12월말 남북 기본합의서는 일본과의 수교를 추진하다가 막힌 상태에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남북 대화를 하는 것처럼 나섰고 그 산물로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이루어졌다, 또 미·북 제네바 핵 합의는 역시 미국과 관계개선을 해야 되겠고 미국의 기업 투자를 끌여 들여야 되겠고 해서 협상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으로서는 현재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하게 하는 어떤 유인도 알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결국 자기가 필요해야, 자기 이해가 걸려 있어야 남한과 대화를 시작할텐데 지금은 남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 어떤 인센티브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남북대화에 응하기 위한 댓가를 미국과 일본에게서 구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한국은 일본과 미국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관계를 통해서 남북대화를 촉구하고 북한을 끌어들일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논문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일본과의 수교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일본으로부터 경제개발에 필요한 Seed Invest를 끌여 들여야 되겠는데 대일 청구권 보상금 약 50억달러의 규모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북한이나 일본측 어디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만, 이 규모가 어떻게 되든간에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또는 한일 공조관계를 통해서 북한을 Control 한다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일본이 북한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허

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통제하고 우리가 65년도에 일본으로 부터 받았던 청구권자금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일본에 요청을 해야 하느냐 이것도 외교적인 딜레마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65년도에 우리가 일본에서 받았던 것을 돌이켜 보면 무상 자금 3억 달러, 유상자금 2억 달러, 그리고 민간 신용차관 3억 달러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북한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남한이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청구권 자금의 규모는 그 당시 일본이 가지고 있던 외환보유고의 절반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받을 것도 일본의 경제력에 걸맞게 일본 외환보유고의 절반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어마어마한 규모의 보상금이 될 것이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북한에 유입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북한의 경제개발, 사회간접투자에 커다란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북한을 남북대화에 끌어들이는 데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는 통제하느냐 하는 게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미국과의 관계개선인데 제네바 핵 합의문이 물론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도 실천과정에서 두어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형 경수로에 대해서도 북한은 분명히 거부하는 입장인데 우리 정부로서는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미국이 주도해서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미국이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해서 북한과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미국은 한국형을 하기로 우리와 약속을 했다 그런 입장입니다. 또 그 당시에 공개는 안되었습시다만 Confidential Minute라고 비공개 이행합의서에도 1,000 MW급 2기로 한다고 명기했다, 그런데 그 1,000MW라는 게 울진 3,4호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를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표준형이라고 명기하지를 못했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미국은 협

상과정에서 북한한테 구두로 양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한·미·일 간에 한국형으로 분명히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우리는 미국과의 합의문에 그것을 명기해 준 적이 없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이 북한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미국정부의 이름으로 하느냐 국제 컨소시엄 KEDO의 대표로서 하느냐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6. 25 정전협정문에 주한 미군사령관 겸 UN군 사령관이 사인하는 UN군 사령관 이름으로 했듯이 국제기구의 대표자격으로 사인하는 것과 미국 정부의 대표자격으로 사인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북한은 지금 KEDO의 대표로 사인하는 것은 아마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처음부터 북한은 미국과 하겠다고 나선 것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분명하게 명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 한·미·일 간에 이에 합의했고 해서 KEDO의 대표로서 사인을 해야 되고 KEDO의 결정에 의해서 한국형을 제공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은 물론입니다.

이 두가지 사항이 아마 4. 21 공급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쟁점으로 떠오르고 북한은 아시다시피 협상전략이라고 합니다만 벼랑끝 협상전략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보았을 때 우리의 대북정책의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대북 강경정책이나 압력정책이나 그런 게 아니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 저도 동의를 표합니다. 남북간 화해 국면과 화해 제스처를 가장 효과적인 대북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부담스러운 것은 이것을 이용한 북한의 이른바, 대남 통일전선전술일 것입니다. 정부가 화해교류 협력 정책을 펴면 북한은 그것을 이용해서 정부 당국을 배제한 채 남한의 정당사회단체, 통일연구단체,

사회운동단체들한테 직접 편지 보내고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1948년 바로 김구, 김규식 선생도 참석했던 남북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그 연석회의 형태가 이름만 바뀌어 가지고 일관되게 계속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과 시민 사회에 여론지도층 지식인들 속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정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고 부정적인 효과는 무엇이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분석하고 그것을 정해 나가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시민사회 여론층이 합리적인 선을 지켜가면서 민족통일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것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구체적으로 정부가 이것은 된다 안된다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심전심으로 어떤 선에서 북한과 대화하고 어떤 선은 잘라주고 하는 것을 국민과 정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 감사합니다. 다음, 문정인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정인 : 저는 간단히 질문 중심으로 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상 이 회의 자체가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주년 기념 세미나인데 지금 서재진 박사님 논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 합의서라는 게 사실 목적적이나 수단적이나, 기본적인 게 모두 수단적이라고 하는, 체제 유지를 위한 하나의 Instrument라고 하는 가정이 다 깔려 있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고 정원식 전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남북 평화통일의 대현장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북한은 기본합의서를 수단적으로 보고 우리는 기본합의서를 목적으로 본다, 이렇다고 했을 때 소위 예상되는 결과는 뭐냐, 기본합의서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하고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박사님께서 사실 북한은 대미·대일 관계개선을 위한 수단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그리고 김

정일이 들어선 후에 기본합의서에 대한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이 어떻게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또 무슨 문제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김정일 체제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조분사절단 파견하는 걸 거부한 이후에 사실상 우리가 김정일 체제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취한 게 아닌데,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대화 상대로 하겠다 이런 걸 우리가 사실상 핵문제라고 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전혀 못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김정일 체제, 지금 승계가 되든 다음에 천천히 4월에 되든 그 후에 되든간에 우리가 어떠한 공식입장을 취해야 남북한 간의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겠는가 라고 하는 남북관계의 원칙의 문제를 우리가 재정립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이것에 대해서 서재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협상카드는 아까 김차장께서도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좀더 심각하게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여간 북한은 협상카드도 없고 협상력도 약하다고 하지만 항상 북한 페이스대로 전부 진전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기본전략이라고 하는 게 남쪽 제끼고 결국에 대표부 설치, 경협 강화, 미국에서는 이미 대북한 경제제재 법령을 많이 규제 완화시켰고 좀 있으면 Most Favored Nation도 추진할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부 설치, 그리고 북한이 생각하기에 소위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문제, 그와 병행해서 주한 미군 철수문제라고 하는, 북한측의 시나리오라는 게 전부 다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물론 미국에 먹혀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지난 1월 24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Resolution 내가지고, Non-binding Resolution 입니다만, 소위 남북관계 개선해야 미·북관계 개선하겠다고 하는 브레이크도 걸고 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북한의 이러한 생각이 바로 먹

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한미관계의 소위 불협화음이라든가 또는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미 정서라든가 그것이 가져올 국내 정치적 파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북한이 결국 협상력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김차장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경수로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차관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컨소시엄 만들어서 파는 건데, 사는 사람이 최고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야 어디 가서 빌려 오든지. 북한 사람들 요즘 계속 하는 게 불란서 가서도 알아 보고 독일 가서도 알아 보는 게 이 컨소시엄 말고 어떻게 financing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 북한의 원자로 문제라고 하는 걸 그렇게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큰 플랜트 수출하는 것, 플랜트 수출하는 데 덩어리가 크니까 국제 컨소시엄 만들어서 파는 걸로 생각한다면 북한이 협상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한국형 경수로 삽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사는 사람한테 물어 보지도 않고 팔기 전에 계약서 만들어서 한국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KEDO라고 하는 걸 만든 그 자체가 어떻게 시방서를 만들고 어떻게 스펙을 정하고 어떤 테크놀로지를 정하고 대화의 광장을 만들고 소위 Terms of Contract, 즉 계약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한국 언론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키워서 경수로다 한국형이다 하다 보니까 협상이 시작도 되기 전에, 장사 흥정이 되기 전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KEDO라고 하는 게 컨소시엄 만들어서 원자로라고 하는 플랜트를 수출하기 위한 협상을 하는 첫 단계인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먼저 시작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협상의 판을 깨는 게 아닌가 하

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북한이 협상력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협상의 카드가 많을 수 있지 않느냐? 특히 대북관계에서 원자력과 관련하여 구매력을 통한 협상력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서박사께 여쭙고 싶은 것은 서박사님의 이번 논문의 기본 구상은 소위 한국은 수세적이고 아주 reactive한 방어적인 전략에서 벗어나서 전략적 공세를 취해야 된다고 물론 전략적 공세주의의 저변에는 소위 Stick & Carrot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전략적 공세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을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당사자주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당사자로 생각하지 않는 데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북한은 미국만을 한반도 갈등과 분쟁과 평화의 당사자로 보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전략적 공세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좀 상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방법 중의 하나는 북한측의 기본 구도가 대개 관계개선,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그런 구도로 보았을 때 우리가 그걸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면서 북측의 의표를 찌를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그런 대안으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서박사께 여쭙고 싶습니다.

사 회 : 마지막으로 이종석 박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종석 : 저는 서재진 박사님 말씀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물론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특히 핵문제 해결도 이강석 선생님과 달리 북한이 체제위기의 본질이 현재 경제적 침체가 나타나고 있고 경제 활성화가 북한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대안이 내부 예비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이제 대외경제관계를 확장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대외경제관계 확장을 위한 것과 핵 카드를 바꿨다, 결국 핵문제는 대외 경제관계 확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핵문제가 여차 해서 북한이 틀어버리면 그 동안에 관계 진전되었던 모든 대외경제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면 이쪽에서 투자한 우리들도 문제가 되지만 북한은 그 자체로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핵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걸 이쪽에서 여러가지 걸어가지고 북한을 코너에 빠뜨리지 않는 이상 어렵다, 그런 면에서 핵회담이나 기타 문제들이 지금은 골짜기 있지만 북한이 이걸 가지고 여기지는 않을 거라는 데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욱이 최소한 북한 전문가라는 입장에서 볼 때 북한체제의 현재 위기를 경제외에 다른 데서 찾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위기는 기본적으로 체제위기이지만 체제위기의 본질이 현재는 경제라는 건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주로 김정일 정권이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에 맞춰 몇가지 말씀드릴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의 권력유지방식에 대해 서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김정일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자유화 바람을 막기 위해서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북한의 체제가 어느 정도나 내구성을 갖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차단과 단절이라면 괜찮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차단과 단절에 구멍이 생기면 그냥 부너질테니까 말이죠.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외부 정보자체를 지도부의 구미에 맞게 분석해서 북한에 광범하게 존재하는 사상학습체계를 통해 대중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여과 장치를 통해 가지고 북한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과장치가 요즘 작동이 시원찮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많은

학습시간 이라는 게 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차단과 단절 이런 체제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북한 체제의 내구성 문제에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북한 당 간부들의 수준에 따라서 또는 직급·직책에 따라서 그들이 받는 직접적인 정보의 양에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군당 비서, 군당 조직부장만 돼도 직접적으로 현재 남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결국 마지막 단계인 대중들에게까지 가기 위한 여과 즉 계속적으로 희석시키고 여과시키는 작용을 하면서 가는 거다 이거죠.

남한이 잘 사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남한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매연이니 종속이니 뭐니 하는 등속을 걸어 이게 무슨 사람 사는 거냐 이렇게 나오고 있지, 남한이 아직도 깡통차고 살고 있다는 식의 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시골지방에서는 있겠지만...

또 하나 개인숭배 지속문제도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개인숭배하지 않을 수 없죠. 그것은 체제의 관성이니깐요.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숭배를 통한 체제유지방식이 이제 한계에 이르렀고 북한이 이른바 유일체제라는 정치적 목표에 경제합리성을 종속시켜온 자체가, 즉 이 유일체제 자체가 한계의 기본원인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용주의적인 경제회생을 통해서 정통성을 강화시키려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개인숭배가 이어지겠지만 향후에는 점점 희석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증거로는 큰 증거는 아닙니다만, 작년 12월 4일에 나왔던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논설을 보면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또 하나 이 개인숭배의 담화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사회정치적 생명, 즉 육체적 생명과 구분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하는 사람은 수령이고 그 토대가 당이라고 규정해 왔는데, 그 논설에서는 갑자기 그 부여자

와 모테가 집단이라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미묘한 변화지만 이것은 이런 식으로 개인승배가 극단적인 주지적인 성격을 갖는 이론을 가지고는 안된다는 부담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길로 비루어 제가 볼 때 개인승배는 점차 약화되는 쪽으로 나가고 실용주의로 갈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아마 체제 생존을 위한 그들의 하나의 고민이고 딜레마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유화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이범식씨가 남북적십자회담을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이쪽 기자들이 평양갔던 소감에 대해서 ‘자유의 바람을 얼마나 넣었습니까?’라고 기자들이 물어보았을 때 그분 말씀이 ‘무슨 자유의 바람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공산화바람을 넣으면 좋습니까?’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이 기억에 새삼스럽습니다.

이미 20여년전 이야기지만 제가 볼 때는 자유화 바람의 빙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8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신있게 ‘남북한 다 터 놓자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했다이겁니다. 공산화 바람이 자유화 바람을 이긴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와서 그들이 갑자기, 물론 우리가 문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문명정부가 두려워서 자유화 바람을 두려워하겠는가?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남북한간의 심화된 경제적차, 생활격차 자체가 결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되면서 가져오게 될 물질적인 상대적 박탈감, 이것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는 것이지 자유화 바람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에 민주화라는 구호가 설득력을 잃었니까 반미 민족주의로 나간다고, 물론 그 뒤에 또 서실장님은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반미라는 구호는 이제 북한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지난 1월 1일자 공동사설에서 재미있는 게 우리 정부를 그렇게 신랄하게 욕을 했는데, 피뢰도당이란 발은 없어

요 이제 반역도배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추적은 못해 봤습니다만 그러나 그 공동사설을 보면서 느낀 것이, 북한이 괴뢰라는 말을 일단 빼고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미국이 주적범위에서 빠지고 제국주의라는 말을 못쓰게 되면 결국 괴뢰라는 말은 성립이 안되니까. 그래서 반대 문제는 좀 달라질 거다. 아마 그것은 추적하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저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물론 체제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회복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이 나진·선봉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북한경제가 현재로서는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에서의 임가공수출, 즉, 외부의 인력이 도입되는 것이 차단되면서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임가공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구 과소지역인 금강산 개발특구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대일 청구권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드들을 잘 사용하면 북한경제의 단기적인 활성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유학생 출신 간부등용문제에 있어 하나만 말씀드리면 유학생 출신을 간부로 등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학생 대부분이 고위직 혹은 당성 좋은 집안의 자녀들이라고 보았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할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지식인의 속성이 망명하는 사람은 망명하지요. 우리도 박정권 시절이나 군사독재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정부의 관료가 되고 엘리트가 됐습니다. 망명을 안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정권에 가장 충실하게 사는 것이 일반적인 속성인데 과연 유학생들이 외국의 소위 개방의 바람을 맞았다고 해서 거기에 와 가지고 달라질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유학생 그룹은 유효한 지적 자원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 말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귀순자 인터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순자 인터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갖는 경험의 제한성이나 인식 범위의 제한성 문제를 일단은 인식하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우리 정부도 과거의 군사독재 시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망명해서 우리 남한사회는 부정부패, 타락, 그야말로 오늘 당장 망할 나라처럼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얘기를 가지고 갑자기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이건 참 대단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개인주의 탐닉이 60%고 체제옹호유지가 40%라는 통계수치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이렇게 출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코 체제도 40여년의 독재를 유지하다가 프랑코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사회의 체제내부의 약간의 이완·일탈현상들이 체제를 붕괴시킬거다 라고 단언을 하는 것은 조금은 나이브하고, 거시적·장기적으로 길게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서 아까 분정인 선생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신 데 대해 저는 좀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수단적인 의미에서 여러가지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북한이 그 동안에 생각해 왔던 남북관계를 과연 어디까지 진전시킬 거냐 하는 나름대로의 자기 한계를 범주화시킨, 확정시킨 문건이고 또 이것 자체를 우리가 얼마 만큼이나 목적의식적으로 목적화하고 또 이것을 목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전범으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한 휴지조각으로 지금 끝났다고 보는 것은 전략적으로, 현실적으로도 조금 속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 회 : 예, 오랜 시간동안 좋은 토론들이 많이 나왔는데, 시간이 없습니다만 회담사무국측에서 한 두 선생님 코멘트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유완석

선생님, 짤막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유완식 : 기본합의서의 성격에 대해 이것이 목적이냐 수단이나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논문에서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남북기본합의서를 그렇게 좁게 해석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를 갖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역시 남북간의 평화공존의 하나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90년에 남북고위급회담이 시작되고 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됐습니다. 그렇게 남북대화를 거부하던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에 동의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북한이 당시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도 변하고 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체제를 어떻게 하면 유지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고 북한의 체제유지의 보장을 받기 위한 것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이유중의 하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한미의 기존 유대관계를 차단해야 한다 - 물론 적극적인 면도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 남북연방제 통로를 열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 제1차적인 목적은 체제 유지였다. 그런데 결국 T/S훈련이 재개되고 하나까, 북한이 기본합의서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된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남북간의 기본합의서 가지고는 안되겠다, 역시 Master Key는 미국이 쥐고 있다, 그래서 대미 관계개선에 우선을 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정권이 김일성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인가 아니면 좀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토론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변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제논문에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체제위협때문에 개혁개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김정일이 개혁개방도 좀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만 결국 체제에 대한 위협의 한계에 부딪치고 만다고 봅

니다.

또 중국과 다른 것은 이 개방이라 하는 것은 개혁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개혁없이 개방하는 것은 커다란 의의를 갖지 못하고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중국식의 개방은 북한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개방하더라도 중국식 개방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주제논문을 발표하신 분은 그것이 핵문제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견이 있습니다. 본래 핵문제가 중요한 이슈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성립된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게 된다면 북한이 1993년에 소위 10대강령이란 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발표했고 이것은 우리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민족우선론에 대한 하나의 대응이었고 남북특사교환 제의로 이어진 것입니다. 특사교환은 실패했지만 결국 카터의 중재에 의해서 남북정상회담에 합의를 본 것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핵문제보다는 통일방안에 있어서 뭔가 합의를 이뤄놓고 죽겠다 이런 뜻이 강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북연방제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만 우리도 3단계통일방안에서 남북연합이란 걸 내놓았습니다. 남북연방제와 남북연합의 협상, 이런 논의에서 어떤 이름이 붙여지든간에 김일성 생전에 통일방안에 하나의 명칭을 정해 놓아야 되겠다, 그것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노리는 주요한 하나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남북대화는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목적이 될 수도 있으나, 남북대화 자체는 교착되고 중단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남북대화는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여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대화-비

핵화공동선언이행은 별문제로 하고-가 아닌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의할 것도 없고 바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 회 :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분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석홍 선생님?

정석홍 : 오늘 서박사 주제논문은 김정일정권의 정책전망이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일정권이 등장해서 정책기조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대로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진단이 중단기로 나왔으면 좋은데, 대체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단기적으로 본 감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까 기본합의서에 대한 평가는 아까 유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다른 분들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북한이 90년에 들어와서 김일성의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분제는 누가 누구를 먹고 먹히는 문제가 아니다’ 또 연행묵도 회담에 나와 가지고 ‘누가 누구를 먹고 먹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하는 등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본합의서는 북한이 그러한 동구권의 붕괴과정에서 자기체제유지가 상당히 시급했기 때문에 그것을 남한으로부터 보장받기 위한 의미가 상당히 컸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일본을 겨냥했다면 기본합의서 정도만 채택하지 뭣하러 부속합의서 만들고 공동위원회 만들고 날짜까지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북한에 우리가 그렇게 유도했는지 모르지만 기본합의서에 대한 북한당국의 인식은 체제를 유지하는 하나의 기본틀로 생각했던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엽적입니다만 몇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북한이 제한된 일부지역에 자본주의제도, 그러니까 나진·선봉지역에 자본주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자본이나 시설을 들여오는 것이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의 경제체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대외자본을 들여오고 시설을 들여오는 것이지 자본주의 제도를 도입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흔히 북한이 상당히 암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걸로 얘기하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전체인구의 60%가 빛나가고 40% 주민들만이 체제통합을 이해, 기존체제를 지켜 나가고 있다는 평가는 귀순자들이 적당히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암시장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농민시장이라 해서 채소꺼리나 팔고 그런 정도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양말정도나 교환하는 정도인데 마치 북한에 암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평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학문적인 차원에서 곤란하다 이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북한의 대남전략입니다. 대남전략 부문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서바사님이 마지막 부분에 '북한이 대남통일전선 전술을 지속할 것이다'고 했는데 통일전선전술은 공산주의 체제의 기본입니다. 지도체제가 망할 때까지 자기들의 통일전선전술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통일전선전술이 전부 다 적화전술이고 공산화 전술이라고 봐서는 안됩니다. 지금 경제적인 합작하는 것도 통일전선전술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것도 통일전선이니까 통일전선전술은 무조건 다 배척해야 할 것이냐? 북한은 통일전선이란 차원에서 대남제의를 하지 남북관계를 뭔가 풀려고 해서 하는 건 아니다. 거기에 우리가 적어도 맞춰서 수용하거나 또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전선전술을 지나치게 적화전술이라고 equal시켜 버리는 것은 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토론할 때도 북한의 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변할 것인가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예측하고 대북정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토론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 회 :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지금 나온 이야기를 전부 제가 요약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간단히 두·세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김정일 정권의 중장기정책을 우리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북한은 확고한 시나리오와 전략을 가지고 그 전략을 대체적으로 관철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우왕좌왕한다 이런 인상을 오늘 토론에서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입장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남북기본합의서도 그렇고 우리의 핵문제 타결도 그렇고 미일과의 수교도 그렇고 다 북한의 각본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궁지에 몰렸을 때, 7·4공동성명이 그랬듯이 외부의 initiative에 의해서 북한이 확확 변해가는, 또 변했다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저앉는 그런 패턴이 북한의 주요한 행태가 아니었느냐고 봅니다.

이번에 핵문제 해결도 카터가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변화한 바 있고 미·일과의 수교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서재진박사가 한 이야기하고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하고 좀 다른데, 물론 제가 일본에서 들은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일본의 정설은 북한·일본하고 가장 중요한 Key는 가네마루가 쥐었는데 가네마루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지역구에서 자기가 지원한 지사가 떨어지고 자기의 인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카드였다 하는 것이 지금 일본에서는 정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휘말려 들었다는 것이죠. 이미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김일성이 신에서부터 인간으로 떨어지는 계기를 일본관리들이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입장을 보면 북한의 전략이 우리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참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것과 연결이 되어서 이 논문에서도 그렇고 오늘 토론에서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는 지금까지 쪽 보면 통일문제라든가 남북관계가 주로

연방제통일방안을 놓고 주로 이루어져 왔고 이것은 결국 이데올로기 문제 차원에서 남북관계가 주로 우왕좌왕해 왔는데 오늘 토론에서 보다시피 주요한 논의는 지금부터는 아마 상당히 현실적으로 정책적인 문제로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번째 문제로서 지적된 것들이 남북당사자간의 협력관계와 국제적 공조체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제시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대일 청구권 자금문제에 있어서의 배상금 규모라든가, 김재홍 차장께서 얘기했습니다만 그건 아마 이렇게 계산하는 게 옳을 겁니다. 우리가 8억달러를 받았는데 그 8억달러이란 것이 당시 일본총예산의 0.5%입니다. 그것을 단순 수치로 해서 50억달러란 얘기가 나온 것은 복리로 계산해서 지난 45년 또는 50년을 계산해 보면 약 45억달러내지 50억달러정도 될 것이다 하는 데서 나온 것이고 아마 그정도 수준에서 타협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북한의 통일전선전술문제에 대해서, 여기 토론에서는 비교적 부정적이고 또 상당히 나쁜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정석홍위원님께서서는 반드시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상당히 흥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 통일전선전술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당국자 배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두려워해 왔는데 앞으로 이 통일전선 전술때문에 궁지에 몰리는 것은 북한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문정인박사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부와 민간부분의 대북접근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앞으로 정부의 심각한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재진박사님이 다 대답하실 건 없을 것 같고, 토론이니까 몇가지 중요한 것만 얘기하시고 점심시간에 좀더 많이 토론하도록 하시지요.

서재진 : 지금까지 여러 선생님들께서 아주 좋은 코멘트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 북한체제의 정책방향을 전망하는 문제에 있어서나 우리의 대북정책을 다듬는 문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일일이 답변을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몇가지 핵심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만 제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강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북한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인 개방을 한다면 핵문제도 제한된 개방을 할수밖에 없다, 따라서 핵투명성이 보장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핵문제 이것은 보다 타율적인 환경과 요인에 의해서 해결되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북한의 향후 입지가 작년에 있었던 NPT 탈퇴와 같은 그런 강력한 무기가 크게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이제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북한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측면에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홍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향후 북한정권의 성격이 김일성의 연장선상이냐, 김정일의 새로운 시작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김일성 그 자체를 그대로 되풀이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김정일이 취해야 될 정책방향이란 것은 변화된 상황속에서 적용해야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정권유지 방식에 있어서 김정일이 다시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런 메카니즘을 강력하게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종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김정일의 자발적인 정책변화에 의해서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제가 조금씩 개방되면서 외부의 바람이 들어오면 결과적으

로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지 김정일 스스로 '우상숭배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전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식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문정인교수님께서 중요한 문제를 많이 제기해 주셨습니다. 우선 기본합의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슷한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기본합의서가 남북간에 협상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북한이 그런 의도를 일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 그 의미를 판단해 볼때에 그 당시는 수단적인 그런 측면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우리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 기본합의서의 가치를 우리 측면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대북협상용으로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북한이 미국과 핵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또 남북합의서가 발효된 이후에 그것을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병행하지 않고 완전히 폐기를 해버렸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그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 남북합의, 기본합의가 조금 수단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미국·일본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병행했더라면 북한으로서 훨씬 효과적이었고 그것이 결국 한반도에 있어서 탈냉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었을텐데, 그렇지 않은 북한의 의도, 배경 같은 것을 좀더 면밀히 분석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정일체제를 어떻게 볼것인가 하는 측면은 우리는 대안없이 똑같은 효과적인 대북전략의 하나로서 김정일체제를 현실적인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겠고,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공존공영이라든지 화해의 전략을 통해서 북한에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접근의 방식에 있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경협이라 하는 것이 북한체제를 강화시켜 준다, 그렇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논리보다는 대북접근이

바로 북한이 남한사회에 대해서 활용하는 통일전선전술의 역통일전선전술 형식으로 우리가 북한에 바람을 집어넣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협상카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를 해 봐야 할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나 정부가 북한을 볼 적에 너무 지나친 적색공포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는 좀더 부각을 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과거 50년대, 60년대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과의 국력면이나 군사력 면에 있어서 뒤졌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제는 국제환경이라든지 경제력면에 있어서 과거시대와는 상당히 다르다 하는 그러한 기초위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을 유도해야 한다, 북한을 주도해야 한다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의 협상력이 이제 점차로 우리보다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북한이 작년도까지 아주 효과적으로 구사해 왔던 NPT탈퇴 위협같은 것이 이제 그 NPT가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 북한의 핵카드 그것은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종석 박사님께서 북한에 있어서는 자유화 바람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학을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 단순히 자유화 바람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정보라든지 자본주의적 상품의 유입같은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구조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자유화 바람이라고 보는데 동구 사회주의국가들과 소련이 붕괴하게 된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대단히 중요했던 것은 이 사회주의권의 사람들이 더이상 사회주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회주의체제 내에서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공식적인 이념속에서 주민들

만의 가치, 공식적인 경제체제내에서 암시장이라든지, 또 제2의 경제같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회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혹자는 뭐 시민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2의 사회, 제2의 체제라고 말들을 하는데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것은 그런 공식적인 사회체제를 밑에서부터, 기둥뿌리에서부터 와해시키는 그런 또 하나의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화 바람이라는 것이 단순한 외부로부터의 정보가 아니라 그것에 의해 침습되어지는 어떤 공식체제의 와해현상, 이것을 자유화 바람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귀순자 증언에 지나치게 의존을 했다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볼 방법이 없을까 궁리해 본 끝에 북한 소설을 상당히 많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귀순자들이 증언한 내용이 북한소설의 많은 귀절에서 북한의 현실을 묘사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봐서 저는 귀순자 한두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80년대 이후 90년대에 나온 소설 같은데 대단히 많은 빈도로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세부적인 묘사를 많이 발견했는데 그런 점들을 제가 하나의 정보로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귀순자들의 이야기들을 좀더 다르게 평가하고 자료로서 활용을 했습니다.

유완식 위원님하고 정석홍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남북대화는 기본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대화여야 한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기본합의서에 대한 평가는 북한의 시각에서 본 것이지 우리측의 시각에서 본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남북관계의 전환점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상황때문에 다르게 평가한 측면도 있겠습으나만 결과적으로 현시점에서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서는 좀더 밀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전선전술에 대해서도 저는 뭐 그렇게 적화통일전략이라고는 보지 않구요. 이것이 남한에 대한 정치공세적 측면도 있습니다만 북한이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통일전선전술은 북한 대내용이라는 성격이 훨씬 강하다고 봅니다. 남한에 대한 비방이라든지 특히 김대통령에 대한 중상같은 것은 대체로 북한의 대내용이지 대남용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통일전선전술을 계속하고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대응하는 방식의 대북강경책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장단에 우리가 춤추는 꼴이다. 북한의 그런 대남강경책의 진의가 내부용이라는데 더 무게를 많이 줄 적에 우리가 보다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 회 : 네, 장시간 동안 매우 의미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곧 점심시간이 되는데 점심식사를 하시면서 좀더 자유로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 Session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 끝.)

라. 제 2 회(15 : 00 ~ 17 : 00)

주 제 : 우리의 남북대화 추진방향
—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방안 중심으로

발 표 : 권 만 학(경희대 교수)

사 회 : 마 권 수(KBS 통일부 차장)

토 론 : 백 진 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신 창 민(중앙대 교수)
이 장 희(한국외국어대 교수)
유 영 구(중앙일보 기자,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강호양 : 남북회담사무국 기획부장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주년 기념 세미나 제2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우리의 남북대화 추진방향」입니다.

제2회의의 사회를 맡으실 마권수 KBS 통일부 차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차장님께서서는 KBS에서 '24시 뉴스'와 '오후 2시 뉴스'를 담당하고 계셔서 더 이상의 소개가 필요없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마차장님 마이크 받으셔서 제2회의 참여자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 : 방금 소개받은 마권수입니다.

현재 제가 KBS에서 「남북의 창」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통일원을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의 데스크를 보고 있기 때문에 평소 남북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남북 기본합의서 발효 3주년 기념세미나에 저를 초대해주신 것은 프로그램을 진행 하는데 있어서 또 뉴스를 내보내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고 또 많은 것을 배워서 방송을 하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주제발표자를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발표를 해 주실 경희대학교의 권만학교수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권교수님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미나는 주제발표 30분, 토론 1시간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신 남북회담사무국 전략반 선생님들께서도 토론에 참여해 주시어 저희들 발표와 토론내용에 교정을 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권만학 교수님 시작해 주십시오.

[주제발표문]

우리의 남북대화 추진 방향

권 만 학
(경희대 교수)

남북합의서 비준 3주년을 맞는 요즘 남북한은 대화 제의를 재개했으나 성사될 전망은 밝지 않다. 외형상으로 보면 지난 3년간 남북대화는 핵문제에 의해 희생되었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으나 핵으로 인해 단절된 남북대화는 여전히 최악의 상태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가? 남북 대화와 핵문제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었던가?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동인은 무엇이며 남북대화 추진 방향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본 발표는 이러한 의문들에 일단의 해

답을 천착해 보고자 한다.

1. 대북정책의 실패와 그 원인

남한의 대북정책은 3년전 “남북기본합의서”를 타결했을 때 가장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다. 고위급 회담 개시후 15개월만에 서명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비록 어려운 문제들을 우회하긴 했지만 포괄적인 남북대화의 틀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실로 획기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세계적 탈냉전과 남한 북방정책의 성공이 남북한 모두를 냉전시대 일방적 주장을 내세우던 태도로부터 양보와 타협으로 유도한 것이다.

하지만 1992년 들어 남북대화는 핵문제에 밀려나기 시작했다. 기본합의서 타결 직후인 1월 조지 부시 미대통령이 급기 방한하여 북한 핵문제에 관해 “한미공조”와 함께 한국이 “당사자”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핵문제는 북한의 과거핵활동에 집중됐으며 한국은 집요하게 이를 추궁했다. 미국은 이 문제를 국제여론의 표적으로 만들었다. 한국과 미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입각하여 북한핵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으나 자신의 요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결여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북한측에 엄청난 협상력이 생겨나도록 만들었다. 70년대 이래 북한의 대외목표는 대미접근이었으며 핵은 북한으로 하여금 서울을 경유해서가 아니라 워싱턴에 직행할 수 있는 티켓을 부여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협상에 성공했으며 제네바에서는 관계정상화 등 그간 주장해 오던 요구의 상당 부분을 충족시키는데 성공했다.

핵문제에 있어 남한은 대결적이며 초강경한 정책을 취했다. 또한 핵해결을 모든 남북관계의 선결조건으로 삼았다. 결과는 남북간 냉전의 회귀였다. 만일 냉전회귀가 남한의 목표가 아니라면 남북합의서 이후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남한은 자신이 고수하던 당사자 해결원칙을 포기해야 했고(94.4), 금과옥조로 여기던 선특별사찰 실시는 제네바 합의(94.10)

에서 적어도 5년 뒤로 미루어졌으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북한·미국 수교 원칙의 공표(94.8)는 남한의 정계와 사회를 뒤흔들었다. 실패의 댓가는 남북대화의 단절과 대화 촉구의 대미의존이며 발언권에 비해 문자 그대로 값비싼 경수로 제공 비용이다.

핵정책의 실패의 원인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반도 핵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남한은 북한핵에 가장 취약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당사자이다. 그러나 북한핵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은 해결당사자가 아니었다. 핵딜레마의 핵심은 방화지리에 등장하는 조개와 도요새 관계와 같아 북한과 미국간 서로 상대방의 급소를 누르고 있는 형세에 있다. 해결은 “당사자”간 타협밖에 없었다. 둘째, 변화된 국제환경에 대한 이해부족을 들 수 있다. 냉전시대의 목표가 극단적 대결로 사회주의를 과대팽창시켜 붕괴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탈냉전시대의 목표는 실용주의여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아 이제는 “자유세계”라는 반쪽가리가 아닌 명실공히 “세계” 전체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미국은 남한과의 냉전적 동맹에 묶여 북한과의 핵홍정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 셋째, 남한 정부의 수동성과 남한 내의 냉전정치이다. 김일성의 사망은 대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호기였다. 그러나 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 정치담론은 냉전화해버렸고 정부는 이를 추수하였다.

남한의 대북정책은 더욱 위기를 맞고 있다. 남북한간 대화가 단절되고 있는 사이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다분히 남한을 소외시킨 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 한반도를 위요한 국제정세

향후 동북아 정세는 북한·미국 제네바 핵합의 이행과 이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이라는 양축을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다. 제네바합의에 따라 95년

들어 북한에 중유가 공급되고 무역·금융제재 등이 완화됐다. 이어 KEDO와 북한 간 경수로 공급계약 및 IAEA에 의한 대북한 통상사찰, 그리고 연락사무소의 교환개설이 예정되어 있다. 전문가회의와 관련 당사국들은 4월까지를 목표로 원자로형과 재정분담을 포함한 경수로 공급의 구체사항, 분담참여에 따른 정치적 요구의 절충등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구체적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이는 향후 핵합의 이행의 “기본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를 둘러싸고 두 가지의 갈등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미국 국내사정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의 대외 조정 부문이다.

미국 내에서는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미 청문회를 통해 제네바핵합의가 북한에 과도하게 유리한 것은 아닌지 따졌다. 북미관계가 궁극적 관계정상화로 나아가는 도정에는 미국이 내걸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수출금지, 인권 상황 개선, 미군유해 송환 등 몇가지 조건이 존재한다. 공화당 의회는 이러한 조건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북한에 자주 곤혹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 견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핵합의는 클린턴 행정부의 유효책 때문이라기보다 작동할 수 있는 강경책의 부재로부터 결과됐기 때문이다. 공화당 의회도 이러한 근본 구조를 변화시킬 수 없다. 나아가 제네바 합의에서도 방출지리의 형세는 유지되고 있어 북한은 여전히 첫번째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과거 핵 카드를, 그리고 아마도 완전 국교정상화가 가까울 때까지 사용후핵연료봉이라는 형태의 미래핵카드를 보유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합의의 파기는 경수로 비용보다 훨씬 비싼 핵확산금지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공화당이 합의 이행과정에서 기술적 태업을 통해 대북 협상력을 증대할 수는 있겠으나 합의의 궁극적 이행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합의 이행과 관련한 “기본틀”의 대강은 금년 4월에 열리게 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한은 공화당의 견제를 더욱 제한적으로 만들 것이

다. 미국으로서는 북핵 문제가 없더라도 이미 NPT무기한 연장에 반대하는 많은 비동맹국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대북제재의 부분 해제와 함께 일단 미국 기업들의 방북길이 트이게 되면 미국 정계에는 “북한로비”와 대북 기득권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이들 대북정책의 탈냉전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북한이 대외적 모험을 하지 않는 한 공화당 역시 북한을 군비확장의 속죄양으로 삼는 냉전사고를 탈피, 동북아 안보체제로 끌어내는 유인책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보다 큰 갈등 가능성은 미국의 대외조정에 있다. 경수로형을 두고 미국이 북한과 벌여야 하는 협상만이 유일한 어려움은 아니다. 미국은 중유와 경수로 제공의 비용과 제공형태를 두고 한국, 일본 등의 국가 사이에서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참여국들은 부담하는 비용 만큼의 정치적 요구를 하게 될 것인 바 이를 둘러싼 갈등이 95년 상반기에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 남한이 60%이상의 경수로 건설비용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 의회는 남한의 요구에 맞추어 정상회담 등 남북화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물론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얼마나 실질적인 노력을 할 것인가는 미지수이다.

여러 갈등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는 본격적인 개선의 길목으로 접어들었다. 북미관계 개선은 주변국들의 대북한관계에서 탈냉전 경쟁의 도화선 역할을 할 것이다. 일본은 “3당선언”을 통해 북한과의 수교 원칙에 합의했으나 그간 핵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일본에서는 당파를 초월하여 대북관계 개선이 2차대전 전후처리의 마지막 숙제로 인식되고 있다. 대중국 접근의 경우와 같이 대북한 접근에 있어서도 일본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네바 합의 이후 북일수교의 결정적 걸림돌은 사라졌다. 다만 “3당선언”에서 일본 여야당은 식민지 지배 뿐만 아니라 종전후에 대해서도 북한에 배(보)상한다고 약속하였는데 전후배(보)상 여부와 식민지 지배 배(보)상의 규모가 다소 갈등적이지만 일본의 경제적 노력과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볼 때 타결가능성은 높다.

한편 중국은 95년에도 여전히 북한의 가장 주요한 맹방으로 남을 것이다. 또한 북한 최대의 우호국으로 존재하는 한 남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 '94년에는 중국이 북한의 핵문제로 인하여 큰 당혹을 당했다. 안보리에서의 비토위협으로 북한과의 의리는 견지했지만 무담은 적지 않은 것이었다. 중국은 “핵이후” 정국에서 기존의 영향력을 현실화하려 노력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4일 이봉 중국총리는 이한희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남북한 및 중국, 미국이 참여하는 ‘2+2’방식을 시사했는데 이는 중국이 이미 한반도에 대한 발언권 강화를 시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의 탈냉전화가 수반할 북한의 영향권 이탈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남한에 대한 구조적 영향력을 획득하고자 할 것이다.

러시아는 급격한 탈사회주의화로 북한이라는 과거의 맹방을 완전히 방기했었다. 러시아의 대북한 영향력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최저이다. 러시아 일각에서는 수십년 쌓은 우호관계를 하루 아침에 포기한 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반성이 일고 있으며 이러한 반성은 특히 러시아형 원자로 채택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면서 더욱 커졌다. 러시아는 북한 재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과거의 안면을 기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과거 러시아 고위관리들이 서방의 대북한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직도 동아시아에서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는 비록 국내 사정으로 인해 강한 주도권을 행할 수는 없지만 지역 질서 개편에서 적어도 단순 비토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동북아 정세의 탈냉전화는 단기적으로는 “냉전적 안정”을 “탈냉전적 불안정”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상대적 후퇴로 일본과 중국간 군비경쟁이 접착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동북아에서 가지는 이익은 급격히 증대해 왔다. 현실주의적 군비경쟁이 안보딜레마로 연결된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각국은 궁극적으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기초적 안보협력체의 출범에 노력할 것이다. 물론 이는 북한의 탈냉전화와 맞

물려 있어 95년도를 넘어서는 장기적 추세가 될 것이다.

3. 북한정세 전망

북한은 현재 정치적으로 “신정권구축”과 경제적으로 식량, 에너지, 외화의 “3부족”해결이라는 두 가지 주요 문제에 당면해 있다. 김일성 사후 권력의 핵인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 직의 공백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분명 비정상이다.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건강문제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 70년대 중반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일의 실질승계를 공개적으로 반대할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쿠데타와 같은 비상한 방법에 의해 권력을 장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제도와 조직이 그에게 잠재적 장애를 조성하고 있을 가능성은 적지 않다. 만일 이러한 분석이 옳다면 북한에서는 물밑 권력투쟁이 전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권력투쟁이 표면화된다면 김정일은 권력승계에 실패할 것이며 잠시 권력승계에 성공하더라도 형식적이 되거나 장기간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이유는 김정일이 김일성과 달리 개인적 카리스마를 결여하고 있으며 카리스마를 구축할 시간과 인민에게 새로이 나누어 줄 “혁명의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김일성과 달리 그는 “급진혁명의 시대”가 아니라 “탈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같은 분석이 맞다면 북한의 권력구조는 “집단지도체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김정일 개인보다 노동당이 구조적 권력을 행사하는 “당적 지배”가 될 것이다.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은 중국식 모델을 택할 수밖에 없다. 공산주의의 붕괴라는 “보편적”현상에서 북한이 예외가 될 것이라는 증거는 거의 없다. 소련 및 동구식 모델은 단명하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렵다. 중국식 모델을 좇아 개방·개혁으로 나아감에 있어 노선투쟁은 치열할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북한 권력엘리트는 현재의 “우리식 사회주의”고수로부터 점차(사회주의이든 자본주의이든) “기득권력”고수로 변화할 것이 예상된다.

이같은 권력투쟁과 노선투쟁이 물밑에서 진행되는 동안 북한은 새로운 모험보다 가능한 한 실리를 획득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것이다. 모험은 파멸에 이를 것이 명약관화한 최후의 선택일 뿐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핵합의 이행과정은 북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행은 그 자체로서 북한에 실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개방을 확대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수반한다. 핵합의 구조로 보아 북한은 남한에 아쉬운 것이 별로 없다. 민족정통성을 두고 경쟁하는 남한과의 관계에서는 탈리오식 대응방식을 취할 것이다. 실리를 위해서는 미국, 일본 등의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한의 경제협력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일본으로부터의 배(보)상금이 가시권에 들어온 현 시점에서 굳이 가시돋친 남한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남한의 대결적 정책이 지속되는 한 북한의 대외관계는 通美近日畏南이 될 것이다. 미국을 통하여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과 가까이 하여 경제난 극복에 노력하며 남한을 외경시하여 멀리 하고자 할 것이다.

4. 남북관계의 구조와 남한의 선택

한반도는 체계지배적(system-dominant)이다. 한반도가 동북아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보다 이의 영향을 받는 쪽이 훨씬 크다. 동북아의 탈냉전화 추세가 가속될수록 한반도는 이의 구조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미국과 일본도 점차 兩韓카드를 쥐게 될 것이며 그 경우 주변국들의 “以韓制韓”정책은 등장할 수밖에 없다. 남북한 관계는 점차 민족내부 관계의 성격보다 국제관계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탈냉전의 동북아 국제정세는 주변국들이 현실정치(realism)와 실용정책(pragmatism)으로 나아갈 것임을 예고한다. 이념보다는 국익이 우위에 서게 된다. 현실정치에서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북한이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한 열강은 냉전시대의 북한배제경쟁이 아니라 북한선점경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일본도 이러한 구조적 추세의 예외가 될 수 없다.

북한 역시 대남관계를 예외로 하고 이미 이념적 대결보다는 실리주의적 대외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적어도 개방 초기 단계에서 북한은 수요독점력(monopsony power)으로부터 연원하는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다. 수요독점력은 주변국이 북한 선점을 두고 경쟁하고 북한 당국이 모든 대외활동을 독점하는 조건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북한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한 북한의 畏南政策은 유지될 수 있다.

향후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주로 남북한 자신, 특히 남한에 달려 있다. 상호 관계 개선을 위한 주도적 노력이 없이는 남북한 모두 주변국 정책의 객체로 전락하고 양자관계를 주변국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5. 대북정책 기조의 전환과 남북대화

남한의 대북관계 관리에는 신사고를 필요로 한다.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언했듯이 남북간 체제경쟁에서 남한은 불가역적으로 승리했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더 이상 이념이 아니라 군사적 위협에 한정된다. 이러한 판단은 물없는 물고기와 같이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군사적 위협도 북한 최후의 선택 즉 필사적 전쟁(desperate war)에 국한될 것이다. 체제적 자신감 위에서 이제 남한은 대북정책을 실용주의화해야 할 것이다.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은 남북한 모두에게 실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며 불필요한 자극을 자제하고 호혜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은 열세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에 기초한 관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용주의는 대결보다 타협이라는 협상의 예술을 요구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선에서 북한 역시 남한과의 대화에 임하게 될 것이다.

신사고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요구한다. 첫째, 대북정책의 목표는 통일이 아니라 기능적 통합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통일정책”은 “대북정책”으로 명명되어야 한다. “통일”의 거론은 북한에서 “흡수통일”의

의구심을 불러 일으켜 대화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1체제 1정부”를 고집하고 있는 현 통일방안의 수정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식의 “연방제”가 아니라 보편적 의미의 “연방제”를 남북연합 다음 단계로 상징하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연방제”의 내용은 협상에 의해 채워넣으면 된다. 지방자치의 확대와 함께 남한도 점차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해가는 추세여서 연방제에 수렴해가고 있다. 통일의 실현을 위해서는 서독의 경우처럼 “통일방안”은 접어두고 그러한 통일로 가기 위한 지금부터의 “통합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기능적 통합은 또한 남한에게 점차 대북 영향력을 증대시켜 주변국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시적 정책 이면에서는 북한이 급격히 흡수통일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통합에 중점을 둔 금년도 대북정책의 구체적 목표는 대화재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단 대화가 개시되면 대화틀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공방처럼 상대방이 거부했거나 거부할 것이 자명한 대화제외는 백해무익할 뿐이다. 어느 일방도 그리고 어떠한 제3국도 그러한 대화를 강제할 수단을 결여하고 있다. 대화제개는 또한 정치적으로 조성될 수도 있으며 사후적 필요에 따라 요구될 수도 있다. 정치적 방법은 위와 같은 신사고와 대북정책의 전환을 성실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정상회담이나 밀사파견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내정이 어려울 때 오히려 이같은 제스처가 더욱 효과적일는지도 모른다.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독을 먼저 방문했듯이 신사고에서는 형식보다 관계개선이라는 실질을 보아야 한다. 정치적 돌파구가 불가할 경우 선당국대화 원칙을 재고해 볼 수도 있다. 호혜적 교류와 협력의 자연스런 증대를 허용하게 되면 일정 시점에 이르러 반드시 당국간 조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기업의 지사가 당국의 연락사무소보다 평양에 먼저 설립된다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일단 대화가 개시되면 결정적으로 대화가 결렬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어려운 이슈가 생기면 이를 두고 겨들하기보다 점진적으로 해결책을 모색

하는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대북정책의 전환을 설득력있게 홍보해야 할 것이다. 관계개선이 대북 패배주의로 비치도록 하는 냉전적 투사를 차단해야 한다. 새로운 정책이 한민족의 통일에 중요한 주춧돌이 된다는 민족주의적, 그리고 남북한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현실주의적 정책임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6. 구체적 대화전략

남북간 현안은 “쉬운 이슈”와 “어려운 이슈”로 나뉜다. 쉬운 이슈는 경제교류, 경제협력처럼 호혜성을 가지는 분야로 쌍방의 필요로 인해 비교적 쉽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어려운 이슈는 양측 체제 및 정권 안보와 직결된 것들로서 통일의 궁극적 형태, 평화협정,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 인권, 인적 및 서신·언론 교류를 포함한다. 신사고는 물론 쉬운 이슈부터 풀어나갈 것을 시사한다. 어려운 이슈에서 일방적 주장의 선관철을 고수하는 것은 결국 그러한 주장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의 진전마저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1) 경제교류 및 협력 : 정부는 이를 제한하기보다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에서 증대되는 상호의존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지지하는 세력을 강화시켜 준다. 거의 모든 경제교류와 협력이 북한 체제에는 독약이, 민생에는 보약이 됨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제도불비와 북한 내의 열악한 투자환경 그리고 과당경쟁이 가져오는 위험부담과 조정의 필요성은 민간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에 맡기고 최초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경제관계를 다른 이슈와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경제관계 개선은 냉전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정당화하기 쉽다. 자본가들보다 더 반공적인 사람들이 있겠는가. 나아가 30억 달러 이상의 경험 제공

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 통합비용을 줄이고 현재의 안보비용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신뢰구축의 계기로도 활용될 수 있다. 물론 경험의 용도에 관해서는 조심스런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

2) 이산가족, 인적교류, 언론교류 : 이 이슈는 북한이 다소 체제에 위협적이라고 느끼는 분야이다. 북한이 원하는 방식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한 그들 방식을 수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붕괴하는 세계사적 시점에서 이같은 조치들이 적화통일에 악용되리라는 것은 기우일는지도 모른다.

3) 핵문제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사찰규정을 협상함에 있어 “특별사찰”을 고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간 남한 정부가 고집해 온 특별사찰은 실질적으로는 “강제사찰(challenge inspection)”로서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종류의 사찰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핵문제는 국제사회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할 능력은 더 더욱 남한 능력 밖에 존재한다. 핵문제에서 남한이 해결역을 자임할 경우 결과는 남한에게 과도하게 떨어지는 정치·경제적 비용뿐이며 남북관계의 악화일 뿐이다. 북한핵문제가 실로 심각해지면 미국, 일본,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발벗고 나설 것이다. 핵문제를 남북관계의 다른 측면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 평화협정 :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 평화협정을, 남한은 남북한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완전 관계정상화로 나아가는 도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기존 정책을 무작정 고수할 것이 아니라 타협되어질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타협은 남북한의 안보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결책은 두 가지로 예상된다. 하나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4자가 참여하는 평화협정이며 다른 하나는 북·미 평화협정과 실질적으로 평화협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대한 미국, 중국의 보장을 연계하는 것이다. 기존의 정책은 남북관계만 가로 막을 뿐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 : “선신뢰구축 후군축”이라는 정부의 기존 정책은 유럽 경험의 편견적 해석으로부터 연유한다. 중요한 것은 “검증” 특히 신뢰할 수 있는 국제기구 등의 검증을 확보하는 것이다. 검증보장이 마련된다면 군축을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 통일 이후 유지해야 할 군사적 규모가 현재의 군축을 막을 명분이 될 수 없다. 또한 검증의 우회적 환경이 경제교류와 협력에 의해 조성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 내의 군사적 상황과 변화에 대한 정보가 교류·협력에 의해 얻어질 때 검증의 실효성은 증대하게 된다. 압도적 경제 우위에 있는 남한 주도의 군비경쟁은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이나 필사적 전쟁을 유발시키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6) 동북아 평화체계 : 정부가 제안한 “동북아안보협력회의(CSCNA)”는 미래의 방향이다. 이는 평화협정, 군축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나아가 합의된 해결책의 보장 수단이 될 수도 있다.

7. 결 론

많은 경우에 그렇듯이 대북정책의 기초와 내용을 바꾸는 것은 정치적이다. 정책 자체의 장단점보다는 정책의 찬반에 밀접한 이해를 가진 세력간의 승패가 정책의 운명을 좌우한다. 분단 반세기 동안 대북 냉전정책은 많은 기득권 층과 사고를 형성했다. 또한 탈냉전의 국제역학은 변화에서 이익을 찾는 새로운 층과 새로운 사고를 배양한다. 지금은 바로 양 사고와 세력이 충돌하는 전환기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그간 남한의 핵정책은 인식부족이라기보다 구 사고의 승리를 의미할 뿐인지도 모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 추세이다. 만일 한반도의 탈냉전이 구조적 요구라면 이에 저항하면 할수록 보다 큰 국가적, 민족적 손실이 초래될 것이다. 만일 통찰적 리더십이 있어 역사를 앞당긴다면 문자 그대로 역사적 치적이 될 것이다.

아직 한국에서 냉전적 시각이 지배적이라면 대북정책 결정자들을 “민족적 현실주의자”로 충원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반공의 명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북한을 “위협”보다 “기회”와 “통합”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인사들이 대북정책을 담당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 대소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던 너슨, 키신저 등이 이러한 유형의 인물들이다.

또한 신사고에 기초한 대북정책에서는 인내있고 노련한 협상가가 필요하다.(과거부터 있어 왔던) 북한의 도발적 언사를 듣고 협상 테이블을 뛰쳐 나온다면 이는 일선 협상가가 이미 최고 결정을 내린 것이나 다름 없다. 어떠한 경우라도 냉정을 잃지 않고 그러한 발언이 맥락에 닿는 것인지, 진의가 무엇인지,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끈질기게 탐색하여 최고 정책결정자에게 풍부한 정책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협상가가 필요하다.

사 회 : 깊은 통찰력이 담긴 주제발표를 들었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토론자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진현 교수입니다. 백교수님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콜롬비아대학 법과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 계십니다.

신창민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교수님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클라리오멘트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이상희 교수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 교수님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독 쾰른대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유영구 기자를 소개합니다. 한양대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중앙일보 기자로서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백교수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백진현 : 권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부분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인식하는 면이나 그동안의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면에서 저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세션의 주제인 남북대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개인적인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현재 남북대화문제는 정부정책결정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골치 아픈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 외무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특히 미·북 관계 개선과 남북대화를 어떻게 조화 시키느냐 하는 것이 아주 큰 숙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마지막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권교수님께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권교수님 페이지를 정독을 했습니다만은 권교수님 주제논문의 요지는 대강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거의 최악의 상태에 있다는 인식이 있으시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가 된 원인규명에 있어서 권교수님께서서는 이것이 상당부분 우리측의 대결적인 대북정책 즉 대북적대정책 그리고 북한을 자극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오늘날 남북관계가 이렇게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판단이 셧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몇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정부가 핵문제의 본질을 잘 몰랐고 국제정세의 변화 본질을 잘 몰랐고 그리고 이런 탈냉전의

시대에 냉전적인 사고를 탈피하지 못한 것이 이러한 상황을 가져오게된 원인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권교수님께서서는 그러나 한반도 주변정세를 보면 지금 탈냉전시대의 주변정세는 굉장히 변하고 있고 더이상 우리의 우방국들이 과거 처럼 이념을 이유로 무조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특히 현재 남북한이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국들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가시화하고 그 결과는 한반도에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미칠 것이다. 그래서 빨리 남북대화를 재개해야된다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북한의 그런 어떤 의도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경우는 남한의 기왕의 대결정책이 지속하는 한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通美近日畏南」입니까? 미국과 접근하고, 미·일과는 접근을 하고 한국은 배제하는 이런 정책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남북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결적이고 적대적인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현재 남북한간의 국력대결이라 할까요 이런 것은 이미 끝난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더 이상 통일 정책 이야기하지 말고 기능적 통합을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대화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이러한 정책전환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되고 이러한 큰 방향에 따른 구체적 전략으로는 경협을 활성화해야되고 이산가족교류를 다시 재개해야 되고 이런 몇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중 상당 부분이 정부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권교수님의 견해와 제일 달리는 부분은 지금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있는 근본원인이 무엇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권교수님께서서는 이것이 우리측의 상당히 대결적이고 적대적인 정책에 기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선 지금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

대외정책의 골자는, 저도 고사성어 하나를 말씀드리겠는데 「연미반남」입니다. 조선일보식 표현인데……. 결국 미국과의 관계개선에는 총력을 기울이면서 한국과의 접촉은 철저히 배격하는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연미반남’ 정책을 취하는 근본적인 의도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 한편으로는 한미관계(공조체제)를 분열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한간의 접촉에 따른 북한 사회의 경제·사회적인 Impact(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연미를 하고 반남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측의 대결정책에 대한 반응으로서 북한측이 이러한 ‘연미반남’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건데는 북한 사람들 나름대로 철저한 계산을 거쳐서 이런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경우는 ‘연미’만 된다면, 미국과의 관계개선만 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 나가더라도 ‘연미’가 되는 한에 있어서는 계속 ‘반남’정책을 계속 고집하리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이 무엇일까? 북한이 계속 ‘연미반남’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정책을 취하더라도 저런 자세로 계속 나온다면 당분간 남북대화를 재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저도 사실 남북대화 재개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단기간에 큰 진전이 있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하고 일본하고 관계하는 것을 그냥 놔둬라 그냥 놔두면, 결국 북한이 미국하고 일본 이런 서방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면 그것이 개혁·개방으로 유도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북한 관계 진전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또는 일본이 북한하고 관계개선 할려고 하는데 대해서 자꾸 제동을 걸지 말고 그냥 놔두라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동을 걸어 봤자 잘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우방국들과 우리하고의 관계에 갈등이 증폭되고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놔두라 하는 견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놔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북관계 개선이 되고 북한이 주변국들과 관계를 개선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작년에 저희 연구원에서 미국의 브루킹스 인스티튜션과 북한의 장래에 대해 세미나를 가졌었는데 그때도 나온 이야기가 북한이 전향적인 개방·개혁을 하든 광범위한 개방·개혁을 하든, 개혁정책을 펴든 기존정책 고수를 하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팩터들이 너무 많아서 최소한이나마의 합리적 예단을 한다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미북관계 개선하는 것을 그냥 놔 둔다면 나중에 지질로 다 뉘것이다라는식의 프레덕션은 근거가 아주 약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북한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디만 ‘반남’을 하면서도 ‘연미’가 된다면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결국은 북한한테 「‘반남’ 하면서 ‘연미’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반남’과 ‘연미’는 동시에는 절대 안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대화 추진이 안되면 미북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사실을 북한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실을 주지시키는 방법이 문제인데, 굉장히 텔레캐이트하고 또 고도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외교 기술적인 문제여서 자칫 잘못하면 효과는 못보고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만 기존의 한미 관계만 손상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숙련된 기술적 솜씨가 요구되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기본 방향이, 결국 북한이 제일 원하고 있는 ‘연미’를 하기 위해서는 ‘반남’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그러한 기본정책방향을 우리가 견지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현재 정부의 기본입장이 미북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개선이 어느정도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국은 올바른 생각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부의 기존 입장과 조금 거리가 있는것인데 현재 정부의 입장이 미북관계 개선과 남북대화를 조화 시킨다는 것인데 남북대화라는 이 용어가 남북대화라는 이 용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라는 것은, 형식적인 대화에 얼마든지 응해 가지고 실질적인 진전없이 공전시킬수도 있고 대화는 그 자체가 수단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식의 연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북관계 개선과 남북대화를 연계시키기 보다는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공동의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라는 공동의 입장이 있을텐데, 그것이 결국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북한의 여러가지 군사적 구조라든지 또는 북한의 인권문제라든지 이러한 북한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방향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공동의 입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뽑아내서 그것하고 미북관계 개선을 전략적으로 연계시켜 가는 그러한 실용적인 어프로치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약 1분만 더 말씀 드린다면 제 생각에는 냉전종식 이후에 학자들간에 소위 ‘제3의 길’은 없는가 하고 한동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결론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미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반도 문제의 핵심

은 결국 북한이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기능적 통합도 좋고 연방제도 다 좋지 않은 이 모든것이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결국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는 계속 풀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는 상황이 계속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워낙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에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는 자체가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남북한이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핵문제에서도 경험했고 그 이후에도 봤지만 남북한이 대화·협상으로 문제를 풀어 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는 국제적 측면을 정확히 인식하고 오히려 우리 경우는 외교적 차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방금 말씀드린 미·북관계 개선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과 탄력성 있게 유연하게 연결시키는 것도 정책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 : 예, 다음은 신교수님 한 말씀해 주시죠

신창민 : 예, 감사합니다. 신창민입니다.

우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자리에 저를 불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페이지를 읽고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생각해왔던 바를 잘 정리를 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지녀왔던 생각을 떠올리면서 권교수님 같은 분을 중앙대학교에 모셔와 같이 연구를 할 수가 없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지금 백교수님도 말씀하시고 그러셨지만 남북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위기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의 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위기의 시기는 1970년대 초반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7.4 공동성명 나오고 그럴때는 통일자체보다는 북쪽에서 혹시 딴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 우리가 불안한 상황, 경제적으로 우리가 저쪽보다 나은게 없었고 정치적으로 독재 하기는 피장파장이고 우리가 더 낫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느꼈던 위기하고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그렇지만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안풀리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자들은 연구를 하면서 뭔가 잘 안풀릴때 그때는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하면 그동안 해왔던 것을 지워 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림을 그려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전에 어떤 시각에 가로막혀 잘 보지 못했던 부분도 다시 살아 나오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한 두마디 말씀 드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정부에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정부로서 외형상으로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흡수통일은 안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모든 외형적인 것을 떠나서 냉철히 내막을 들여다 본다면 과연 흡수통일 말고 우리가 생각할수 있는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이 된 사회를 생각하게 되면 두가지는 절대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하나는 자유민주주의고 또 하나는 시장경제체제입니다. 이것 두가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본질적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기본방향인데 저쪽에서 바라는 방향과는 완전히 각도가 틀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흡수통일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와같은 흡수통일을 대가를 적게 치루고 앞당길 수 있겠는가 하는데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바로 김덕 부총리께서도 취임 일성이 통일문제를 신화로부터 현실로 끌어내리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하셨고 이것은 아주 현실적이고도 적절하신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와같은 우리의 목표가 설정되었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실현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면서 과감하게 행동에 옮기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민주평통에서 상임위원회 하면서 얼마전에 간부되시는 몇분들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때 어느 한분이 “김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하다 뭐냐하면 북쪽에서는 변한게 없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자명한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조율만 하면 되느냐 하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대통령이 한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 불충이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신상에 불이익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옛날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설령 김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대통령과는 달리 전체적인 대세가 어느쪽으로 간다하면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그런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권교수님께서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쉬운 문제를 우리가 쉽게 풀려고 하지 않고 자꾸 어렵게, 뭐를 갖다가 자꾸 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쉬운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거기서 한발짝 나아가서 통일이라는 말조차도 쓰지 말고 대북정책이라는 말을 씀으로 해서 북쪽 사람들을 뭉 수 있으면 자극을 안시키면 좋겠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지금 본질적인 것을 갖고 얘기를 나눈다고 한다면 역시 쉬운데서부터 풀어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할텐데, 결국 지금 권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쪽의 자존심 문제라든지 체제유지에 관련되는 것들을 이쪽이 걸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자꾸 이쪽에서 조금 미숙하게 대응하는 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바로 경수로 문제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쪽의 관계되는 분들은 경수로 문제에 대해 실제로 별로 한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도 뭔가는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뜻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형”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술적인 문제에 관계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서 부터 “한국형”이라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돈을 그만큼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데, 자꾸만 “한국형”이 됐느냐 안됐느냐를 따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존심 문제까지 걸리게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면을 중시해야 되는데 너무 외형적인데 관심

을 갖다가 오히려 쉬운 문제를 어렵게 해 나가는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한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권교수님께서 관계개선을 주목표로 해가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경제교류협력이 역시 관계개선에 상호 이득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동안 계속 말씀드려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두가지를 좀 구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남북관계의 구도 속에서 통일로 가는 통일구도와 남북이 현실적으로 입연히 내치해 있는 대결구도라는 두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전에 핵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경제교류협력을 모두 묶어놓아 제가 대결구도를 가지고 통일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바뀌어 가면서 이제는 쉬운테서부터 통일쪽으로 가자고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마당에 저는 오히려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될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역시 아무리 남북관계가 상호 이득이 되는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대결구도는 그대로 불밑에 깔려있다는 생각을 하고 경협이 잘 나가니까 군축문제도 거기에 따라서 함수관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틀이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통일구도 쪽으로 노력하고 현실적으로 대결해 있는 구조도 확실히 인식해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교수님 논문내용은 거의 저하고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군비문제, 군축문제가 당연히 연결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북쪽을 가급적 조속히,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것과 직결이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저쪽을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쪽으로 통일을 이룩하려면 결국은 저쪽 주민들을 외부의 세계와 단절된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이것은 결국 경제교류협력을 통

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북쪽의 당국과 일반대중을 이원화 시켜서 대책을 세우고 생각을 하는 구도를 잡아야 되겠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남북간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같은식으로 해서 서로 정치적인 협상의 틀을 잘 만든 다음에 서로 오손도손 투표해서 통일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왜그러나 하면 북쪽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해 오는 행태를 너무 잘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양보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양보를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사람들이 우리와 통일이 된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 상태에서 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통일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쪽의 집권층하고 일반대중들하고의 생각이 달라짐에 따라 가능한 것입니다.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게 정말이다 아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은 진심으로 가서 운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로 통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쪽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절제되어 있기 때문에 체제가 유지되는 것인데 그들의 욕구를 급팽창하게 만드는 것은 역시 남북교류 협력을 통해 시장체제, 자유의 물결이 들어감으로 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생산능력이 발전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팽창되어 공급과 수요간의 엄청난 괴리가 생기는 데서부터 통일의 기운이 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정부의 측면에서의 수요부분입니다. 그 중요한 부분들이 군비지출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경제건설 한다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이 되겠지요.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것들을 해내야될 때, 결국은 전체적인 총수요의 크기가 공급을 엄청나게 앞질러 갈때 그 괴리가 생김으로 해서 결국은 내부적으로 붕괴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군축문제 역시 너무 쉽게 풀이점으로 해서 북쪽의 생활수준이 올라가게 되어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여유를 주는 것보다는 지출, 즉 군비지출과 사회간접 지출이 너무 힘에 겹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되지 않는가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북쪽에 있는 동포들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리하지 않고 당신네들이 한다고 할 때를 기다리겠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북쪽에 이러한 것들이 스며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대화 문제에 있어서 여러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역시 권교수님이 논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 왔던 것은 당국간의 대화만을 대화라고 생각했는데 개념자체를 남북간의 총체적 대화의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어떤면에서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가지는 외형적으로 형식을 갖춘 당국간의 대화인데 이것도 중요하지요. 물론 언젠가는 그게 되어야 되지만 그것을 앞세워서 다른 부분에서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역시 뭔가는 움직여 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와 부합된다고 한다면 뭔가는 움직여주는 부분이 진행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진행이 된다고 했을때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놓고 여기에 당신이 들어가시오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신뢰하고, 사실 지금 모든 것을 다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 좋다고 저쪽에 가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물들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정부에서는 각 기업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서 뒤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주는 구도를 잡아서 나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게 진행이 되다보면 결국은 저쪽의 필요와 이쪽의 필요에 의해서 당국간의 자리가 마련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화란 것은 한쪽에서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필요할 때 되는 것인데 그런 필요한 장이 빨리 올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는 움직여 주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훨씬 우리 목표에 더 근접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 회 : 이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장희 : 발표자가 소상하게 남북문제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 남북대화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소박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최근의 남북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10월 21일에 타결되었던 북·미 핵합의 입니다. 북·미 핵타결을 분수령으로 해서 8개월동안 핵문제로 인해 완전히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의 새로운 한반도의 문제로 던져 주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 통일방안에 나와 있는 화해협력시대로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열어 주었다. 두번째는 지금까지 경수로 지원에 대해 여러가지 이론이 있지만, 일단 경수로 지원이라는 지렛대를 북한땅에 박음으로써 북한을 국제사회와 개방화시대에 끌어 들였다. 또 세번째는 이제는 미·일, 미·북 수교로 인해 주변국가들이 교차승인에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물론 지금까지 남북대화가 되지 않은 것은, 이미 지적이 되었는데만, 북한이 변화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요. 또 북한의 이중성에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도 문제가 없었느냐? 권교수님 논문에서

도 이미 지적되었지만, 작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조문파동때 저는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남북대화도 중요하지만 남남대화도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이끄는 여론지도층 사이에도 생각이 다르고 또 우리정부와 국민들 사이도 이렇게 견해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남북대화 보다는 우리안의 남남대화도 충분히 해야 되겠다 시대정신은 지금 상당히 앞서 가는데 여론지도층이나 일반국민들은 아직까지도 60년대 초기의 냉전시기의 생각을 갖고 남북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정부는 상당히 전향적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지도층은 아직까지도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소신을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단체에서 지난해 7~8월 조문파동이 있었을 때 정부종합청사 주변을 하루에 두번씩 띠를 두르고 집회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우스운 얘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 앞으로 통일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정부는 정말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제일 정확히 남북관계를 취급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정보를 정확히 여론지도층에 알려줘서 과거 60년, 70년대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빨리 설득시키고 의식전환을 시켜서 과거의 타성에 붙은 그런 대북관으로 인해 최소한 정부가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북한의 주적이 변했습니다. 과거에 제1의 적은 미제국주의고 제2의 적은 일본이었는데 이제는 이사람들이 한국을 멀리하고 미국에 접근하여 관계를 정상화 하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모순된 체제를 계속 연장하려면 외부의 어떤 가상 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적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남

함을 주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론지도층들이 하고 있는 일이 북한이 목표로 하는 명분축적에 기여를 하고 있지 않느냐. 또 우리가 남과 북이 만나게 너희들을 잡아 먹는게 아니다. 너희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도록 해준다는 것을 정책으로서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와 만나게 부담이 없게끔 대화정책을 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국가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통일외교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야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지만 주변의 4대강국들이 과연 한반도 통일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습니까? 주변·통일외교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통일된 한국이 주변국가들에게 결코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치밀하게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북간의 핵타결된 이후에 우리 통일정책이 나가야 될 큰 방향은 역시 우리 통일방안에 있는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1민족 1국가단계입니다. 그러면 화해협력 단계가 뭐냐 하면 진정으로 화해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만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화해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가 북한과 상의없이 화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철저한 상호주의 보다는 좀 유연한 상호주의를 할 수 없는지 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 체제가 어떤 체제라는 것은 이미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저쪽이 이판사판으로 나와서 불장난을 일으킬까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사회 내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개방으로 가는 것이 살길이고 그 체제를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힘을 쓸수 있도록 우리가 과연 대북정책을 펴고 있는지. 오히려 거기에 있는 강경파들이 힘을 쓰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화정책에 있어서도 신조의 윤리보다는 책임윤리에 입각한 대화정책에 철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동서독의 대화전략에 있어서도 서독은 어떻게 하면 신조윤리에

입각한 동독사람들의 사고를 책임윤리에 입각한 사고로 전환시키느냐는 것이 그사람들의 고민이었어요. 동독 사람들도 서독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잡아먹는 거다, 체제를 넘기려 하는 것이라는 고민들을 했어요. 그래서 서독은 정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책들을 폈습니다. 물론 자칫하면 저쪽 체제를 연장시켜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체제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대화정책은 책임윤리에 입각하는 쪽으로 의식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치우치기 보다는 정말 책임윤리에 입각한 실질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화해협력이라고 했는데, 이 화해협력이라는 것은 서로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것인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내에 “북한 괴뢰”라고 쓴 법령들이 4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고쳐서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에 관한 법률, 불수급 처리에 관한 임시특별법, 국호 및 일부지방명과 지도색 사용에 관한 건 등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남귀순자 특별법은 최근에 이 용어를 고쳤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용어도 고치면 좋지 않느냐, 우리가 최소한 도덕적으로 저 사람들에게 약점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있으니깐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해 최근에 나타난 자료에 보면 그쪽 체제가 이제는 갈때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교수님의 글에 대해 다 동의하면서 2가지 정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통일정책과 대화전략이 어디에 기초해야 되느냐 하면 저는 어디까지나 다음의 2가지 문서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남북기본합의서이고 다른 하나는 미·북 합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2가지가 지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2가지에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미·북 합의문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많습디다. 우리 이름은 한자도 안들어갔는데도 우리에게 부담을 주니까 국제법적으로 제3자적 효

력이란 측면에서, 조약이 제3자에게 의무를 줄려면 비엔나 협정에 의해 제3자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미·북 합의문을 통해서 북한에 연3천명 정도 인적자원이 투입되고 많은 건설장비가 투입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어떻게든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이 미국에게 바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라도 북한을 국제규범을 지키고 개방화·국제화로 끌어 들여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오리엔테이션시켜야 합니다.

오늘이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평화의 장전이고 우리 한민족의 자존심이다 이거죠. 한번도 우리끼리 뭔가 하자고 약속한게 없어요 7·4공동성명도 글자 그대로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 합의서는 양쪽이 정치적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했던 어떤 간에 양쪽이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이것을 성실히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권교수님이 얘기한 평화협정등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평화협정만 하더라도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 또 부속합의서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만 한다면 북한이 더 이상의 논리를 만들어 낼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화전략에 있어서 기본합의서와 미·북 합의문과 그리고 우리가 내세우는 공동체 통일방안의 테두리내에 기초하여 재조명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권교수 논문에 대한 제 소견입니다.

또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 기능주의를 강조하셨는데, 사실 저는 남북 대화 전략에 있어서 기능주의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남북간에는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평화협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전적 의미의 평화협정이란 것은 그안에 3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전쟁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조항과 영토조항 그리고 귀순자 송환문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전적 의미의 평화협정은 우리가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전쟁

의 근본원인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는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김일성이는 틀림없이 전범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협정이란 것은 이런 것보다는 기본관계를 정상화하는 의미의 평화협정을 말합니다. 저는 남북기본합의서도 이러한 의미를 감안한 협상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신기능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통일방안에서 중요한 것으로 정상회담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남북이 어느 정도의 비정치적 분야에서 서로 접근하다가 안되면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상이 만나가지고 논리를 초월한 어떤 것을 합의하자는 신기능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권교수님께서 연방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통일방안중에서 가장 느슨한게 지역연합식이며 그다음에 국가연합, 연방이 됩니다. 우리 통일방안에는 연방적 색채도 들어가 있습니다. 권교수님이 단순히 연방제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리는 것은 북한이 사용하는 용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통일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두번째는 그러한 의지를 담을 수 있는 논리성을 가진 합리적인 통일방안이 있어야 되고 세번째는 의지와 통일방안이 있어도 국내외적으로 유리한 통일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세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남북대화는 지금 안되고 있지만 민족문제를 해결할 시기는 지금이 제일 적기이다. 국제환경은 제일 적기다. 일본이 만약 유엔에 가입하여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제정신을 차리면 한반도에 대해 온갖 간섭을 시작할 것입니다. 다들 집안문제도 어리둥절할때인 지금 어떻든지 빨리 돌파구를 열어 민족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책임윤리에 입각한 대화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 : 다음은 유영구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구 : 제가 이런 자리에 잘 나오지 않았습시다만 이번에는 회사에서 강력히 권유를 하고 해서 나왔습시다. 거기에는 아마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북전략에 노고가 많은 당국자들에게 한두마디라도 언론사에서 해 줄 얘기가 있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시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아! 북녘동포’라는 연재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 정세에 관해 신경을 쓰지 못했습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한 4~5개월 전 얘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시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 세미나에서 느끼는 것은 발표하시는 분이나 토론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상론에 관심이 많이 가 있다. 다시 말하면 대안을 찾다 보니까 자꾸 이상론에 빠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현실을 정확히 점검하자는데 주안점을 두겠습시다.

권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제가 느낀 것은 전반적으로 시사점이 돋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논리도 정연하고 시각도 진보적이고 대안도 비교적 설득력 있는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선감도 넘치고 배울점도 많았습시다. 그렇지만 문제를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 심층적으로 논의해 볼만한 문제가 적지 않았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우선 제가 구체적인 문제를 9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크게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관계의 현재의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저의 기본생각을 밝히고 9가지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시다.

합의서가 발효된지 3년이 되었는데 어째서 합의서대로 실현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의 핵심은 핵문제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도 계속 핵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남북관계 만큼은 여전히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관계진전이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로섬 게임이 작동하는 한 수세에 몰리면 공세와 타협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 것은 상식

입니다. 합의서 채택 당시에 북한은 공세의 축으로 한국의 운동권 등에 호소하는 통일전선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협의 축으로 당국간의 관계를 진전시켰습니다.

그러면 당시 북한은 왜 수세였습니까?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외교적 고립의 심화와 경제난의 가중이 수세요인이었습니다. 이를 돌파하는 방법으로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일관계에 진전을 동시에 고려했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북한으로서는 얻어낸 것이 있다면 단기적이었지만 민족내의 통일열기를 고양시키는 점에서 통일전선전략을 쓰기에 유리한 환경을 일시적으로 조성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궁극적인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핵문제가 돌출되면서 핵문제의 성격은 핵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가 대결구조에서 전혀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데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기본합의서가 실현에 옮겨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려 했는데 이때 북한의 의도는 두가지였습니다. 통일의 열기를 고양시키는 것하고 실제적인 성과로서 경제난 극복이나 외교를 다변화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 두가지 축을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지금도 이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전제는 북한이 정권이양기에 들어와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일성이 살아있는 조건과 사망한 조건이 다릅니다. 현재의 발등의 불은 무난한 권력승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권력승계과정을 외풍없이 진행하려고 하면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에 김일성 사망 이전처럼 적극적인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간의 대화를 하지 않고도 해방 50주년이라는 민족정서를 이용해서 통일열기를 고양시키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북한지도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을 향해서 통일전선전략을 본격 가동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이쪽 정당, 사회단체에게 계속 추파를 던지는 것도 그런 구조에서 나왔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경제난 극복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도 아니고 남한 당국과의 관계를 개선한다고 해서 단기적인 성과가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한국의 기업들과 물밑접촉을 통해 상당한 재미를 보면서 또 당국간 대화는 회피하고 이런 상황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별로 손해볼게 없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핵을 고리로 해서 미국과의 관계까지 한꺼번에 쥐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북쪽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한국과의 당국간 회담에는 별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당국이 내세우고 있는 김일성사망 조문 파동에 대한 사과를 받는 문제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문제는 당분간 대화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남북한 당국간 대화를 재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북·미관계의 진전과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설사 미국이 북한에 남북대화 재개를 강하게 요구하여 북한이 대화에 응하더라도 시간끌기식 탁상공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남북한이 이러한 제로섬 게임을 끝낼수 있는 조건은 서로 체제유지에 자신감이 넘치고 상대측이 무너지리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조건이 되어야만 제로섬 게임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한국정부가 생각하기에 북한이 설사 김정일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얼마나 버티겠는가 하는 시각이 존재하고 또 북한당국이 생각하기에 남한사회가 다원화되어 당국간 대화를 무시하고 통일전선으로 나갈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한 제로섬 게임은 계속될 것이며, 실질적인 관계개선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좀 비관적 전망이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난을 극복하고 무난한 정권유지와 체제유지가 초미의 관심이고 한국정부 역시 민간정부하에서 정치발전을 하면서 내적통합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발전보다는 각자가

살 궁리를 하면서 상대측이 약화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직한 표현입니다.

발표문에서 핵문제에 대해 남한이 대결적이고 초강경적인 정책을 취했다고 권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핵문제 해결을 모든 남북관계의 선결조건으로 삼았고, 결과적으로 남북한이 냉전으로 회귀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이후에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당국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는데 그 설명의 기저에는 우리의 초강경 자세가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를 가로막는 요인이었다는 지적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북한 내부에 합의서 이행과 이를 통한 당국간 관계의 진전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냉정히 봐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한 내부의 강경세력은 상대측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무너지거나 혼란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적극적으로 관계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대단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반통일세력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딜레마입니다. 이러한 강경세력은 남북한내에서 실질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건을 고려하면 남한의 대결적이고 초강경한 정책때문에 냉전으로 회귀한 것이 아니라 양쪽 정부안팎에 냉전적 입장을 견지하고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보는 정치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것을 자꾸 아니라고 우기면 모든 가정이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점에서 대북정책의 실패라는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 대북정책은 그런 세력에 의해서 붙때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내에서 의견이 다른 것을 통합해 내는 과정이 이제부터 중요해지는 것이지 정부가 강경하게 나갔던 것이 북쪽에 심각한 자극이 돼서 문제해결이 안되었다는 것은 상황인식에 별로 도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수년간 세월이 흐르면서 양쪽 체제가 굳건하다는 것을 상호 인정하는 그때 점진적인 통일로 향해 나갈 것이고 어느 한쪽이 흔들리면 급속한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는 민족앞날에 엄청난 혼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혼란에 대한 대비도 정부는 계속 준비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발표문에는 김일성이 사망했을때 대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호기였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지금 당국 안팎의 전문가 사이에서도 그때에 우리가 왜 부드럽게 나가지 못했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내부적으로 냉전세력들이 강하게 얘기했고 정부가 결국 거기에 쫓아갔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 정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고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북한에 김일성이라는 존재가 죽었는데 한국정부가 유화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해서 북한이 적극적인 대화자세로 나왔을까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화론자들은 김일성 사망의 호기를 놓쳤다고 설명하는데 저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일성 사망은 북한의 체제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7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 위기는 일단 극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망당시 시점에서 북한의 권력층이 남북대화에 신경을 쓸 수가 있었겠는지, 또 권력의 승계자 김정일이 주민들이 엄청난 충격속에 있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임했을까도 의문입니다.

한국내부의 조분파동은 북한에 대화를 당분간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뜻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대응잘못으로 냉각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한국내부에서 엄청난 정치적 소용돌이의 가능성이 있는 조건에서 대북관계에 열심일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러한 상황에서 대북관계에 열심이라면 그것은 대북관계를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에서만 적극적일 것입니다. 79년 10.26 사태 이후에 북한이 남북대화 제의를 했고 잠깐 대화를 한 적이 있음을 상기해 보

면 압니다. 정치적 혼란기에는 어떠한 대화도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될 것처럼 얘기한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또 1년이 지난 내년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이 대북제의를 하고 설사 정상회담을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남북한 당국간 접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과연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까 하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북한정권이 불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정일이 정상회담을 치룰수 있도록 국가주석에 취임한 것도 아닌 불안정하고 비정상적 상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발표분에는 권교수님께서 권력투쟁 가능성을 얘기하시면서 집단지도체제로 바뀔 것이라는 다른 표현이 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 기존조직이나 제도가 김정일에게 잠재적인 장애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대목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북한의 현재의 제도와 조직은 김정일 자신의 작품이라는 것이 여러경로로 확인됩니다.

74년 6월에 당정치위원이 된 뒤에 김정일은 75년부터 77년에 이르는 3년동안에 당·정·군을 포함해서 북한의 모든 국가에 관련되는 기구등을 유일지도체제로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김정일이 행사하도록 구조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심지어 군대에서 부대이동을 하거나 예산을 짜는 것도 김정일의 수표가 없으면 안될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 77년정도라는 것이 증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과 국가, 군대에서 유일체계를 확립했고 현재 김정일의 권력기반은 바로 이같은 제도화를 통해서 유일후계자로 군림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불발에서 권력투쟁을 하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그 증거를 하나라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있다면 제가 말한 가정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의 노동당 장악과 군부장악이 거의 분명함으로 사실상 대권은 이미 잡은 것이고 그야말로 질차만 남겨놓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아버지에게 비해 떨어지는 키리스마를 조직장악으로 메울려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대목입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김정일은 순조로운 권력승계를 위해 나가고 있다고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서두르지 않느냐 하면 저는 여기에는 다섯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김일성 사망추도 분위기를 더 끌고가더라도 불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번째는 권력승계가 늦어진다고 해서 당장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세번째는 김정일시대의 성공적 개막을 위해서라면 아예 7차 당 대회를 개최하고 김정일 자신이 마련한 헌법을 발표하면서 그것을 7차 당대회에서 통과시키고 헌법에 기초해서 최고인민회의를 10월이나 11월에 선거를 하고 그 이후에 바로 국가주석으로 취임한다면 완전히 김정일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일성 시대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질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적인 고려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려면 1주기를 넘기고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1주기를 지내고 한 3개월 정도 7차 당대회 준비를 하면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50주년 때 아마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것이 제 추측입니다만 전문가 선생님들의 좋은 조언을 바랍니다. 네번째는 김정일시대의 활력있는 출발을 위해서라면 세대교체를 포함해서 권력핵심의 부분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버지 시대의 사람과 자기가 길러낸 사람과 혼합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새출발을 힘차게 할려면 세대교체를 보여줘야 하고 그런데 자기의 정치적 지지기반 속에는 빨치산 1세대가 아직도 자리잡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배합하는가 하는 인사문제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는 김정일시대에 맞는 전반적인 정책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대미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 대미관계가 아직도 북한에서는 유동적이라고 파악한다는 것이 제가 받은 인상입니다.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봅니다.

정부나 학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집단지도체제나 노동당이 주도적 권력을 행사하는 당적 지배로 나갈 것이라는 전망에도 역시 저는 찬성하

지 않습니다. 통일원에서 한동안 당적 지배라는 말을 써가지고 저희 출입기자들이 가끔 신문에 쓰고해서 제가 그 문제를 여러경로를 통해 검토해 봤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3가지 이유 때문에 당적 지배라는 형태는 안됩니다.

첫째 이미 노동당이 주도적 권력을 행사해 왔고 그 권력의 정점에 수령이 존재합니다. 당적지배가 이미 관철되고 있고 그 위에 수령이 있는 권력구조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두번째는 수령제 사회주의를 바꿀 징후가 없고 수령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주체사상의 포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80년대 중반에 주체사상이 이미 수령제 사회주의에 입각한 이데올로기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수령제가 없어지면 지금의 주체사상도 골격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곧 정치적 권력기반의 이데올로기적 기저를 무너뜨린다는 뜻입니다.

세번째는 북한은 집단지도형의 권력구조에 경험이 없습니다. 적어도 한국전쟁 이후에 김일성의 단일권력체계가 유지되어 왔고 67년에 조선노동당이 김일성의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한 이후에는 아무런 정치적 도전세력도 없었고 유일적 지도체계만이 계속되었던 사회입니다. 그 속에서 집단지도체제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김정일이 물러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만약 집단지도체제가 된다면 이것은 권력체제가 붕괴하는 상황이 된다고 예상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제가 발표하려고 정리해 온 것이 많이 있는데 시간을 너무 뺏는 것 같아서 정리해 온 것은 필요한 분께 드리기로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대북정책에서 실용주의적 정책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북한이 통일전선전술을 포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불

때 우리사회는 건강하다고 파악합니다만 북한은 통일전선전술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지금 기업인과 민간들의 대북접촉이 활발합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 일각에서 진보적 입장에 있는 분들은 내버려 뒀다. 그 사람들이 건강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정부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판단을 많이하고 그것을 걱정하는 분들은 내버려 두면 안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접점은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조정력을 갖는 의미에서 민간접촉을 활성화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막으려고 한다고 해서 막아질 것이냐에 대해 저는 회의적입니다. 지금 민간정부에서 국가보안법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운명인데 앞으로 창구일원화를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기업인들이 접촉하는 것을 정부는 막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창구일원화가 점점 깨지는 조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각계각층의 대북채널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협력을 얻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는 일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그러한 요구들을 통합해 내고 조정을 하고 하는 노력을 부 단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정력을 빨리 회복하여 우리 기업인이나 언론인들이 북쪽과 접촉을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입장과 개인의 입장이 별로 다르지 않도록 내적인 통합능력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통일방안이나 접촉 방법 등 갖가지 문제들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딜레마는 내적통합의 의문 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거도 잔뜩 앞두고 있고 점점 대통령 선거시기가 가까우면 가까 울수록 정파간에 통일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텐데, 적어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통일원만큼은 고유한 부분이 되어서 다른 쪽에서 개입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빨리 갖추지 않으면 저는 북한에서 통일전선술을 쓰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질적전환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논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제 소신에 관한 얘기인데,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논리적 판단을 위해서는 엄청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방법은 남북간에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우리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서 뭔가를 내놓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전에 북한이 하던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류는 한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군사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내놓으면 북한이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핵문제로 앓은 우리의 주도권이 민족내부 문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논리적인 검증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 : 나름대로 당국자 다음으로 아마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기자님의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또 학계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권교수님께서 이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권만학 : 고맙습니다. 사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모두 전문가이시고 또 토론에 참여하신 선생님들도 전부 일가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이 여러개가 제기되었습시다만 다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고 시간적 제약도 있고 해서 일일이 대답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논문을 발표하면서 기본적으로 깔고 있었던 인식이 우선 남북한 내부보다는 외부가 훨씬 빠르게 변화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는 역시 탈냉전의 여러가지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징후가 남북한 내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남북한 내부에는 남북관계의

경색때문에 아직은 냉전적인 힘이 강하지만 주변의 영향이라든가 시대적인 변화등에 의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힘이 또한 등장하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냉전으로부터 탈냉전으로 넘어가는 중간단계에 있다는 것이 저의 기본인식입니다.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정부 안이든 정부 바깥이든 적어도 북한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는 2개의 큰 조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 구체적인 주체에 있어서 똑같은 생각만을 갖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인식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남북관계의 탈냉전도 크게 보아서 내일 닥쳐올 문제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보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분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남북한이 서로 늦으면 늦을수록 주변국가들은 보다 더 양측에 대해서 소위 2개의 카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한제한(以韓制韓)” 정책을 쓴다는 것인데, 즉 한민족의 한 부분을 이용해서 다른 한민족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도 적어도 북한문제에 관한 한 한국정부의 이야기만을 듣고 대응하는 냉전시대의 정책에서 상당히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기는 어쨌거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필연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풀어나가야만 되는 당위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말씀드린대로 전환기적인 정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찰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력을 갖는 것이 오히려 전환을 빨리 이룩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 논문에서 북한 책임론이 좀 약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의 주제에서 북한측의 정책에 관해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책임론 부분을 약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원인만을 찾아 가지

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뻔합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 우리쪽의 책임은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증점적으로 파헤쳐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쪽에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고침으로서 개선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측면에서 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저쪽이 책임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꿀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쪽에서 바꿔줘야 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저쪽의 책임을 계속 밀고 나가면 방법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남북관계개선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우리쪽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북한이 반드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두고 봐야 될 것이지만 그것 아니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가능한한 시도해 볼 만한 대안이 아니겠느냐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대화가 안되면 회담사무국의 존재이유가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대화를 좀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정부내에서도 그러한 전환기적인 정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다 더 경직되고 과거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부서보다도 앞으로 남북회담사무국이 좀더 우위에 서고 이쪽의 주장이 좀더 관철이 된다면 한국도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 : 권교수님의 주제발표, 그리고 신창민 교수님을 비롯해서 오늘 토론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의 말씀이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남북회담사무국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주년 기념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주년 기념 세미나 회의록

인 쇄 1995년 3월 7 일
발 행 1995년 3월 9 일
발행처 남북회담사무국 기획부 기획과
참여자 5급 정 강 규
인쇄처 웃고문화사
